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2023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55-01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202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0255-01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2023. 11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관리연구소) 김영식

●● 연구 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관리연구소)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김영식(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정유경(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이영미(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자 문 진

우원상(법률사무소 지율,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조용완(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민(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소장)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 활용 데이터 목록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1. 연구 내용	8
2. 연구 방법	10
제2장 해외 공공간행물 납본정책 조사	17
제1절 해외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7
1. 해외 납본정책 조사개괄	17
2.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7
제2절 해외 학위논문 납본정책	51
1. 해외 납본정책 조사개괄	51
2.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4
제3절 시사점	82
1. 해외 정부간행물 발행정책 시사점	82
2. 해외 학위논문 발행정책 시사점	82
제3장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조사	87

제1절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87
1. 조사 개요	87
2. 공공간행물의 납본현황	88
제2절 국내 학위논문 납본현황	94
1. 조사 개요	94
2. 학위논문 납본 현황	95
3.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현황 조사개괄	101
제3절 시사점	110
1.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시사점	110
2. 국내 학위논문 납본현황 시사점	110
제4장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15
제1절 공공기관 납본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115
1. 개괄	115
2. 공공간행물 납본업무 담당자 인터뷰 분석 결과	118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120
제2절 대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122
1. 개괄	122
2. 대학도서관 납본업무 담당자 인터뷰 분석 결과	125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127
제5장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131
제1절 전문가 자문위원회	131
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활용	131
2. 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133

3. 전문가 자문 종합	138
제2절 법제도 자문	140
1. 법률전문가 자문 개괄	140
2. 도서관법 및 시행령 개선	142
3.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145
4. 도서관법령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147
제3절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155
1.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55
2. 국내사례 종합 및 시사점	156
3. 자문 의견 종합 및 시사점	157
4.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157
참고문헌	159

표 목 차

<표 2-1> 호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8
<표 2-2> 오스트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9
<표 2-3> 벨기에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0
<표 2-4> 캐나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1
<표 2-5> 칠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2
<표 2-6> 콜롬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2
<표 2-7> 코스타리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3
<표 2-8> 체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4
<표 2-9> 덴마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5
<표 2-10> 에스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6
<표 2-11> 핀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6
<표 2-12> 프랑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7
<표 2-13> 독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8
<표 2-14> 그리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9
<표 2-15> 헝가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29
<표 2-16> 아이슬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0
<표 2-17> 아일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1
<표 2-18> 이탈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2
<표 2-19> 일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3

<표 2-20> 라트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4
<표 2-21> 리투아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4
<표 2-22> 룩셈부르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5
<표 2-23> 멕시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6
<표 2-24> 네덜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6
<표 2-25> 뉴질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7
<표 2-26> 노르웨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8
<표 2-27> 폴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39
<표 2-28> 포르투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0
<표 2-29> 슬로바키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1
<표 2-30> 슬로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1
<표 2-31> 스페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2
<표 2-32> 스웨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3
<표 2-33> 스위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4
<표 2-34> 튀르키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4
<표 2-35> 영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5
<표 2-36> 미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5
<표 2-37> 중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6
<표 2-38>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의 종류	48
<표 2-39> 디지털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의 납본 여부 ...	50
<표 2-40> 호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2
<표 2-41> 오스트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3
<표 2-42> 벨기에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3

<표 2-43> 캐나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4
<표 2-44> 칠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4
<표 2-45> 콜롬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5
<표 2-46> 코스타리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5
<표 2-47> 체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6
<표 2-48> 덴마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6
<표 2-49> 에스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7
<표 2-50> 핀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7
<표 2-51> 프랑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8
<표 2-52> 독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8
<표 2-53> 그리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9
<표 2-54> 헝가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59
<표 2-55> 아이슬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0
<표 2-56> 아일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1
<표 2-57> 이탈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1
<표 2-58> 일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2
<표 2-59> 라트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3
<표 2-60> 리투아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3
<표 2-61> 룩셈부르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4
<표 2-62> 멕시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5
<표 2-63> 네덜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5
<표 2-64> 뉴질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6
<표 2-65> 노르웨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6

<표 2-66> 폴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7
<표 2-67> 포르투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8
<표 2-68> 슬로바키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9
<표 2-69> 슬로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69
<표 2-70> 스페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0
<표 2-71> 스웨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1
<표 2-72> 스위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1
<표 2-73> 영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2
<표 2-74> 미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2
<표 2-75> 중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3
<표 2-76>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6
<표 2-77> 학위논문의 납본 책임자	76
<표 2-78> 납본대상 학위논문의 종류	77
<표 2-79>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	78
<표 2-80> 학위논문 납본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형식	80
<표 2-81> 학위논문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관리 형식	80
<표 2-82> 10대 주요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및 수집/보존 방식	81
<표 3-1>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88
<표 3-2>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89
<표 3-3>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90
<표 3-4>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91
<표 3-5>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92
<표 3-6>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93

<표 3-7>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95
<표 3-8>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 현황	96
<표 3-9>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현황	97
<표 3-10>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98
<표 3-11>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포함)	99
<표 3-12>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보정)	100
<표 3-13>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102
<표 3-14>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103
<표 3-15>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104
<표 3-16>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제출 학교 수 변화 ·	105
<표 3-17>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 ·	106
<표 3-18>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납본현황 ·	107
<표 3-19> dCollection을 통하여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	108
<표 3-20>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본 제공을 동의한 학교 ·	109
<표 5-1> 주요 자문내용 (윤희운 교수)	133
<표 5-2> 주요 자문내용 (조용완 교수)	135
<표 5-3> 주요 자문내용 (이승민 교수)	136
<표 5-4> 주요 자문내용 (백원근 소장)	13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내용 요약	12
<그림 1-2> 연구방법 요약	14
<그림 2-1>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47
<그림 2-2>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의 종류	48
<그림 2-3> 디지털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의 납본 여부 ·	50
<그림 2-4>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74
<그림 2-5> 납본대상 학위논문의 종류	77
<그림 2-6>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	78
<그림 2-7>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발행정책	79
<그림 3-1>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88
<그림 3-2>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89
<그림 3-3>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	90
<그림 3-4>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91
<그림 3-5>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92
<그림 3-6>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93
<그림 3-7>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95
<그림 3-8>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 현황	96
<그림 3-9>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 현황	97
<그림 3-10>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98

<그림 3-11>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포함)	99
<그림 3-12>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보정)	100
<그림 3-13>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	102
<그림 3-14>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103
<그림 3-15>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104
<그림 3-16>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제출 학교 수 변화 ·	105
<그림 3-17>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 ·	106
<그림 3-18>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납본현황 ·	107
<그림 3-19> dCollection을 통하여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	108
<그림 3-20>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본 제공 동의 학교	109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가 문헌의 포괄적 수집과 영구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핵심 사명 수행
- 동법에 의거, 누구나 도서관 자료(동법 제3조)를 발행 혹은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법적으로 납본해야 함
 - 납본제도는 국가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이며 (윤희운, 2002; 2003), 한 나라의 지식문화 유산이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실천적 수단임 (곽승진 외, 2013)
 - 이러한 납본제도는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한 국가의 출판된 유산을 수집 및 접근, 목록화 및 보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Ngoepe & Makhura, 2008)
-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행·제작하는 공공간행물(학위논문 포함)은 학술·역사적 가치와 활용·보존의 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납본도 의무화하고 있음(도서관법 21조 2항)
 - 상기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은 정책수행 과정 및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연구의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입안 및 행정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중요한 자료
 - 정부간행물은 국가와 국민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김소량, 2019),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동태 파악이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서향기, 2008)
 - 정부간행물은 기초 자료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일차 정보원으로서 정부기관의 공식성, 신뢰성, 객관성을 반영하며 국가 정책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음 (서향기, 2008; 김소량, 2019)
 - 하지만 이러한 정부간행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간행물을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으로 인식하지 못해 납본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소홀하게 관리한 한계 존재 (서향기, 2008; 김소량, 2019)
 - 또한 학위논문은 학문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의 지적 유산 중 하나이며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 (이승민, 2019; 양은정, 2021)
 - 그러나 학위논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위논문 납본 정책 및 지침이 미비하며, 더구나 대학 기관의 학위논문 납본 필요성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승민, 2019)
-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 발간자료가 오직 디지털 파일 형태(Born Digital)로만 발행·제작되는 추세가 급증함으로 인해, 공공간행물의 법적 납본

수집에 한계와 어려움 발생

- 현재의 <도서관법> 제21조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있는 디지털 자료를 제외하고, 오직 인쇄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납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공 간행물 및 학위논문이 디지털 파일 형태(Born Digital)로만 발행될 경우 현재의 납본 규정은 이들 자료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한계 존재
 - 온라인에서만 활용 가능한 전자출판물은 정보 생성과 접근의 편리함 등으로 생산 및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보성, 남영준, 2010), 이들 온라인 자료는 납본 현황은 매우 미흡한 상황 (곽승진 외, 2013)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자료 포맷의 다양성,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성,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납본제도 변화가 꾸준히 제기 (장보성, 남영준, 2010; 곽승진 외, 2013)
 - 이에 따라 일부 국가의 납본법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이러한 납본법의 개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Zarndt, Carner, & McCain, 2015)
 - 공공기관(대학교 포함)에서 발행하는 공공간행물(석박사 학위논문 포함)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납본을 통해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만의 발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 제도는 동 자료들의 포괄적 납본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 존재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발간자료의 경우, 발행 매체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법제화 방안의 필요성과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납본업무 체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곽승진 외, 2013), 최근에는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독립적 납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 (이승민, 2019)

- 특히 공공간행물(학위논문 포함) 중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 자료의 납본 수집 방안을 위한 법 제도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생산되는 자료의 납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
- 이를 통하여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공공간행물(학위논문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공간행물이 중요한 국가지식문화유산으로서 영구 보존되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접근 ·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주요 국가별 납본 관련 법제도 · 정책 현황 조사 분석
- 주요 국가별 공공기관 발간자료 납본 · 수집 현황 조사
- 국내 공공기관 발간자료 납본 · 수집 현황 조사
-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제안

3. 연구 활용 데이터 목록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
- 공공간행물
 - 지난 3년간 공공간행물의 발간에 활용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및 국가기록원에서 발급한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정보

- 지난 3년간 납본된 인쇄본 및 디지털본 공공간행물의 정보
- 학위논문
 - 지난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학위논문의 정보
 - 지난 3년간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학위논문의 정보
 - dCollection에 등록된 대학별 학위논문 현황 통계
- 인터뷰 및 기타
 - 공공간행물(학위논문 포함) 납본 업무 및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별·기관별 담당자 인터뷰(서면, 전화, 화상, 면담 등) 수행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주요 국가별 납본 관련 법제도 · 정책 현황 조사 분석

- 먼저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중국, 일본 7개 국가의 납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각 국가의 납본 관련 일반적 법제도, 정책 현황, 납본의 세부 절차 조사 및 비교
 - 각 국가의 납본의 세부 내용인 납본 대상 및 제외자료, 방법, 보상 여부 및 과태료, 저작권법과의 연계 조사 및 비교
 -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납본과 관련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
- 상기 주요 국가의 사례와 함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조사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 관련 선진 사례 조사 · 제시
 - 특히 온라인 형식으로만 출판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 유무에 대해 조사

나. 주요 국가별 공공기관 발간자료 납본·수집 현황 조사

- 주요 국가도서관의 공공기관 발간자료 수집 제도, 특성, 현황 등
 - OECD 국가 중 국가도서관이 공공간행물의 납본 수집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집 제도, 특성, 현황 조사

- 납본 수집 담당자를 화상 혹은 서면 인터뷰하여 납본 수집 여부, 법적 근거, 필요성, 납본 절차를 파악
- 납본 기관, 발행현황 통보 시스템, 납본 인센티브, 저작권 양도 상황을 조사

○ 주요 국가도서관의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수집 현황 조사

- OECD 국가 중 국가도서관이 석박사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집 제도, 특성, 현황을 조사
- 납본 수집 담당자를 화상 혹은 서면 인터뷰하여 납본 수집 여부, 법적 근거, 필요성, 납본에 대한 인식도 조사, 납본 절차 파악

다. 국내 공공기관 발간자료 및 납본·수집 현황 조사

○ 국내 공공기관 발간자료의 발행 및 납본·수집 현황 조사

-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공공기관 발간자료를 대상으로 실질적 납본 수집 유무 조사
- 공공간행물을 인쇄자료(디지털파일 포함)와 온라인 자료로 구분하여 각 자료 납본 현황 파악
- 특히 온라인으로만 생산된 공공간행물 현황을 파악하고, 납본 유무 조사
- 각 기관별 공공간행물 납본 담당자 등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수행, 공공간행물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운영 상황, 납본 절차, 문제점 파악

○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수집 현황 조사

- 최근 3년간 국내 대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의 납본 현황 조사

- 국립중앙·국회도서관 등 관련 기관 학위논문 납본 현황 데이터 수집·분석
- 각 대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 담당자 등 관계자 인터뷰를 수행, 학위논문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운영 상황, 납본 절차, 문제점 등을 파악

라.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도서관자료의 법적 정의 및 납본 의무 이행 요건 구체화
 -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 필요성 제시
 - 도서관자료의 법적 정의 및 납본 의무 이행 요건을 구체화
 - 도서관법, 시행령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보안을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
- 공공기관 발간자료의 납본 정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상기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는 공공간행물의 납본 정착화를 위한 법제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도출
 - 특히 공공간행물이 점차 온라인 형식으로만 발행되고 있으며, 학위논문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되며, 납본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의 추세를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2. 연구 방법

가. 국내외 문헌 및 현장 사례 조사

- 국내외 문헌 조사
 - 납본은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책무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내외의 연구가 존재

- 납본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 문헌을 조사 비교·분석
 -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
- 현장 사례 조사: 해외 공공간행물 납본 사례 조사
- 초기 조사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공공간행물 납본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구체적으로, 공공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명확한 구체적 법제도가 없으며 일반적인 납본의 차원에서 공공간행물의 납본을 다루고 있는 국가들과 납본의 주체에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정의하여 이들이 출판하는 자료도 모두 납본의 대상이 됨을 제시하거나, 납본의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을 정의하여 납본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 분석
 -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인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중국, 일본의 공공간행물 납본의 법적 근거, 절차, 현재 상황을 조사
 - 더불어 공공간행물 납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들의 공공간행물 납본의 법적 근거, 절차, 현재 상황을 함께 조사
 - 해외 국립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간행물 납본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상 혹은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재 공공간행물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운영 상황, 납본 절차, 문제점을 파악
- 현장 사례 조사: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 사례 조사
- 국내 공공간행물(학위논문 포함) 납본 관련 기관 사례 조사
 -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려되고 있으므로, 납본에 관한 실제 현장 사례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

- 국내 국립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간행물 납본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재 공공간행물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운영 상황, 납본 절차, 문제점을 파악

○ 연구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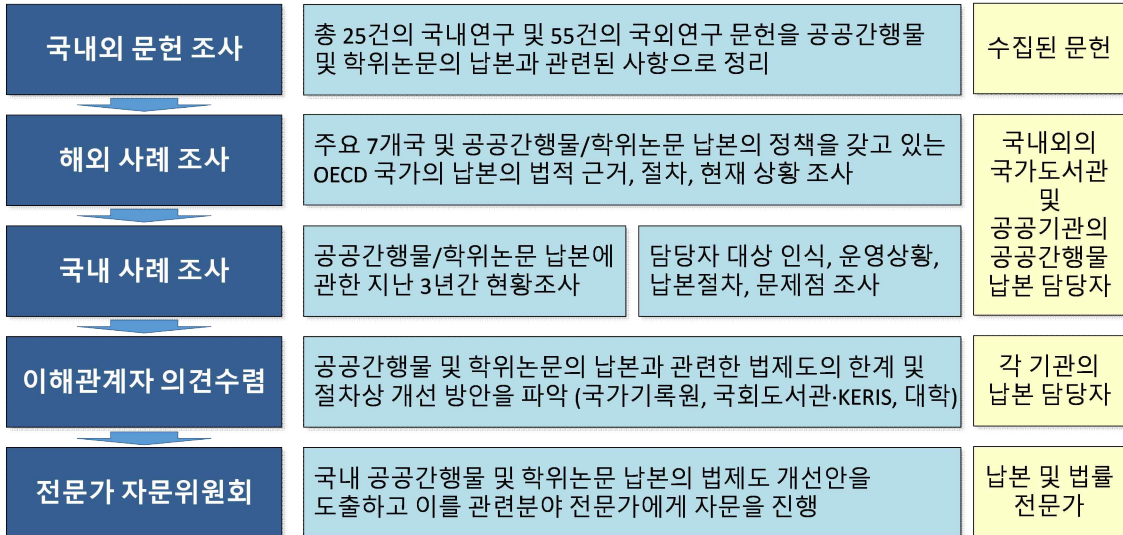


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

- 공공간행물 납본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공공간행물 납본과 관련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담당자,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여 현재 공공간행물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의 한계 및 절차상 개선 방안 파악
 - 공공간행물 납본과 관련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학위논문 납본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학위논문 납본 및 수집에 관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담당자 및 주요 대학교 학위논문 납본 담당자 면담을 수행하여 현재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한 법 제도의 한계, 절차상 개선 방안 파악
 - 필요 시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한 대학원생 및 대학교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활용
 - 국내외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의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진행
 - 관련 분야 전문가로 문헌정보학계 · 출판 관계자 자문 의뢰
 - 납본 관련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 관련 법률전문가 자문 의뢰

○ 연구방법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그림 1-2> 연구방법 요약



제2장

해외 공공간행물 납본정책 조사

제1절 | 해외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제2절 | 해외 학위논문 납본정책

제3절 | 시사점

제2장 해외 공공간행물 납본정책 조사

제1절 해외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 해외 납본정책 조사개괄

가. OECD 국가의 납본정책 현황

- OECD 국가 중 국가도서관이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집 제도, 특성, 현황 조사
- OECD 국가 중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납본하는 국가의 납본 수집 담당자 서면(이메일) 인터뷰 진행, 납본 수집 여부, 법적 근거, 필요성, 납본 절차 조사
- 납본 기관, 발행현황 통보 시스템, 납본 인센티브, 저작권 양도 상황 조사

나. 주요 국가별 납본정책 현황

-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중국, 일본 7개 국가의 납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납본 관련 일반적 법제도, 정책 현황, 세부 절차를 조사하고 비교
 - 납본 대상 및 제외자료, 납본 방법, 보상 여부 및 과태료, 저작권법과의 연계를 조사하고 비교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사
 - 특히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은 세부적으로 조사

다. 자료수집 시기 및 결과

○ 분석 대상

- 37개의 OECD 국가의 납본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 현황 및 관련 사항 조사

○ 수집 시기

- 2023년 8월 중순(8/14) 1차, 9월 초(9/12) 2차, 10월말(10/30) 3차 연락

○ 수집 결과

- 2023년 11월 27일까지 총 32개의 나라에서 응답하여 분석에 활용
- 나머지 5개의 국가(칠레, 이스라엘,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는 웹사이트 및 문헌 조사로 대체

라. OECD 국가별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 호주

- 호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 호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 Copyright Act (1968)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대상으로 정부간행물(Government Publications)은 반드시 납본되어야 한다고 명시 - 저작권법의 '국가 도서관 납본과 무료 발행 제도 (National Library Deposit and Free Issue Schemes)'에 따르면 국가 부서들 및 기관들 (Commonwealth Departments and Agencies)이 생산한 인쇄 및 디지털 간행물은 모두 납본의 대상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이며 인쇄 본과 전자판 가능한 경우 전자 방식 납본 선호, 전자판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 물리적 납본 허용 (2016년 개정)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국립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정부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부간행물 수집 - 온라인 정부간행물은 국가 eDeposit 서비스 (National eDeposit Service)를 통해서 신속하게 납본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호주 국립도서관 웹사이트¹⁾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 오스트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Obligatory Delivery Ordinance: PIAV PflAV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행물(State Publications)은 의무 제출 조례 (Obligatory Delivery Ordinance: PIAV)에 명시되어 있으며 납본의 대상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출판물/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자료로 한정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 불가 (법 개정 중)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의 국립도서관의 수집과 (Acquisition Department: Erwerbsabteilung)에서는 ISBN 발급현황²⁾을 바탕으로 납본되지 않은 출판사 및 정부의 출판물을 요청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도 ISBN을 발급받아야 함)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은 국가 연합 목록 (National Union Catalog: OBVSG) 구축을 위해 지역도서관 (대부분 대학도서관)을 활용하여 연방정부(Bundeslander) 소속의 9개의 지역 정부(Landesregierungen)의 출판물을 추적 -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할 것을 요구하며 납본되지 않으면 여러 번의 알림을 통보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납본 관련 법률 (Mediengesetz MedienG: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은 오직 출판물과 DVD 혹은 USB와 같이 물리적 저장장치에 담긴 디지털 문서만을 납본 대상으로 규정³⁾

1) <https://www.nla.gov.au/using-library/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함 - 특히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서는 이미 디지털 출판물의 자발적인 납본을 받기 위해서 제출페이지를 마련하여 디지털 출판물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준비 완료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⁴⁾⁵⁾

3) 벨기에

○ 벨기에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 벨기에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Overzicht van de regels inzake het wettelijk depot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에게 제공되는 정부간행물(Government Publications)은 납본 대상으로 명시 - 법적 납본은 벨기에 영토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과 해외에서 벨기에 국적의 저자가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이 대상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 불가 (법 개정중)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의 납본은 다른 출판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본이 이루어짐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출판물은 법률상 납본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납본은 할 수 있음 - 현재 디지털 출판물도 법적 납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납본될 수 있도록 법률의 확장을 위해서 작업 중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벨기에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⁶⁾

2) 현재 ISBN의 발급은 오스트리아 출판사 협회(Hauptverband des Österreichischen Buchhandels) <https://buecher.at/>

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ISBN의 발급현황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고 있음

3)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0719>

4) <https://www.onb.ac.at/bibliothek/pflichtablieferung/faqs>

5) <https://www.onb.ac.at/en/library/legal-deposit/>

6) <https://www.kbr.be/nl/wettelijk-depot/>

4) 캐나다

○ 캐나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 캐나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⁷⁾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해야 하는 캐나다 출판사 및 생산자의 일부로 캐나다 정부의 부서들이나 기관들 (Government of Canada Departments and Agencies)을 납본 의무 대상으로 규정 - 따라서 캐나다 지방, 지역 및 시 정부의 공식 간행물은 납본 대상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출판물도 대부분 디지털로만 발행된 자료임 - 따라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고 주간 수집 목록 (Weekly Acquisition List)⁸⁾을 생산하는 정부 부서를 통해서 디지털 연방정부 간행물 수집 - 캐나다 국립도서관은 동 목록을 사용하여 국립도서관 장서에 필요한 사본을 다운로드함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쇄 간행물은 거의 없지만, 인쇄물이 있으면 정부 부서에서 납본을 위해 국립도서관으로 제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나 시 정부간행물은 수집하지 않음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캐나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⁹⁾

7)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L-7.7/page-1.html#h-345269>

8) <https://publications.gc.ca/site/eng/weeklyAcquisitionList/lists.html>

9)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Pages/about-legal-deposit.aspx>

5) 칠레

○ 칠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 칠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ey 19733 ¹⁰⁾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기본적으로 인쇄 및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받고 있으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¹¹⁾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의 납본은 일반적인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납본 - 특히 전자간행물의 경우 Electronic Legal Deposit 페이지를 활용하여 납본 수행
출처	- 미응답으로 칠레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²⁾ 참조

6) 콜롬비아

○ 콜롬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 콜롬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44 of 1993, Art. 7.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납본법이 물리적 미디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 불가 - 디지털자료의 법적 납본을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 준비 중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인쇄물의 경우 국립도서관에 2부를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경우 메타데이터가 관계된 플랫폼인 SIISE로 납본 진행
참고 사항	- (디지털자료의) 법적 납본 정비를 위한 법 개정 준비 중 - 현재의 납본과 관계된 법률은 물리적 출판물에만 한정, 새로운 법은 물리적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 납본 요구할 것임

10)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86049&buscar=19.733>

11) <http://www.bibliotecanacionaldigital.gob.cl/bnd/612/w3-propertyvalue-174013.html>

12) <https://www.bibliotecanacional.gob.cl/deposito-legal>

	- 개정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공식적인 디지털 출판물의 경우, 국립도서관은 보존과 접근을 목적으로 그 출판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콜롬비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³⁾

7)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 코스타리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Printing Law,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6683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을 규제하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납본 대상
디지털 간행물	- 납본법에 디지털자료를 포함하며, 제작된 형식으로 납본 따라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 납본 관련 법률은 정부간행물을 포함하는 코스타리카 영토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 혹은 디지털 출판물이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코스타리카의 ISBN 발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출판물 보고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납본이 되지 않은 정부 출판물을 파악하여 납본 요청 - 디지털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 및 디지털 도서를 보내야 하며, 입수가 완료되면 영수증 발송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코스타리카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⁴⁾

13) <https://bibliotecanacional.gov.co/es-co/servicios/profesionales-del-libro/deposito-legal>

14) https://www.sinabi.go.cr/servicios/depositoLegal/dep_publicaciones_elec.aspx

8) 체코

○ 체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8> 체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Dig. Nr. 35/1995, 37/1995, 320/2002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기간행물의 법적납본은 법률 제37/1995호 및 개정된 법률 제320/2002호에 의해서 규제 -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납본의 대상이며 특히 상기 법률은 납본 대상으로 공공간행물 명시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rn-Digital 문서에 대한 법적 납본의 의무는 없으며, 내구성이 있는 매체(대부분 CD와 DVD, 때로는 카트리지도 있음)의 전자 문서만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는 총 5부의 법적 납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2부는 체코국립도서관에, 1부는 모라비안 랜드도서관(브르노)에, 1부는 연구 도서관(올로모우츠)에, 1부는 출판사가 속한 지역 연구 도서관에 각각 제출 - 법적 납본제도의 주된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통계정보 수집이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 - 지역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출판업자에게 5만 CZK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의 변경을 제안할 계획, 2025년에 새로운 법률 제시 예정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체코 국립도서관 웹사이트¹⁵⁾

15) <https://www.en.nkp.cz/services/services-for/legal-deposits/legal-dep-n>

9) 덴마크

○ 덴마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9> 덴마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Danish Legal Deposit Act ¹⁶⁾ Order on Mandatory Submission of Published Material ¹⁷⁾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법에 따라 공개된 서면 자료(Written Material)는 법적 납본의 대상이며 이는 정부간행물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납본 대상으로 공공간행물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의 출판물도 납본 대상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정부간행물은 모두 법적 납본의 대상으로 고려되며, 국립도서관의 목록에 올리고 두 개의 사본을 받아 한 부는 대출 가능 - 공개되거나 출판된 디지털자료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¹⁸⁾를 통해서 납본해야 함 - 물리적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가 존재하면 두 가지 형태 모두를 납본해야 함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이 우려되는) 취약한 자료나 1부만 납본받는 경우, 대출 불가능. 2부가 있는 경우, 나머지 1부는 도서관 내부 연구자료실에서만 이용 가능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덴마크 국립도서관 웹사이트¹⁹⁾

16) <https://pro.kb.dk/en/legal-deposit/what-legal-deposit>

17)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2005/636>

18) <https://www.kb.dk/om-os/pligtaflevering>

19) <https://pro.kb.dk/en/legal-deposit/questions-and-answers-about-legal-deposit>

10)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0> 에스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egal Deposit Copy Act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의무를 갖는 대상으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으로 규정 - 모든 법인과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출판하는 간행물은 모두 법적 납본 대상 - 인쇄물 및 디지털자료를 납본해야 하는 출판물의 제작자로 인쇄소 및 관련 당국 (Authorities) 또는 개인임을 명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일반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도 납본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²⁰⁾

11) 핀란드

○ 핀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1> 핀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Act on Depositing and Preserving Cultural Materials ²¹⁾
규제 방식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의 공공간행물은 법적 납본법 (Legal Deposit Law)의 납본 대상으로 명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법적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은 모두 다른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납본됨
참고 사항	- 만약 정부간행물이 정부 활동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 621/1999조(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20) <https://www.rara.ee/en/for-partners/for-publishers/sailitusekssemlar/>

	Activities 621/1999)에 따라 대외비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이를 명시해야 하며 동 자료는 일반인 접근 제한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핀란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²²⁾

12) 프랑스

○ 프랑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2> 프랑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Heritage Code (Articles L131-1 to L133-1 and R131-1 to R133-1-1)
규제 방식	- 정부간행물은 법적 납본 대상이며,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최근에 법안 통과로 디지털/온라인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할 수 있음 ²³⁾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도 일반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납본
참고 사항	- 디지털 출판물의 법적 납본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에 디지털 출판물의 법적 납본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적용을 위한 법령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프랑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²⁴⁾ ²⁵⁾ ²⁶⁾

21)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7/20071433>

22) <https://www.kansalliskirjasto.fi/en/legal-deposit-office>

23) <https://www.bnf.fr/fr/centre-d-aide/depot-legal#bnf-les-5-questions-les-plus-pos-es>

24) <https://www.bnf.fr/fr/legislation-relative-au-depot-legal>

25) <https://www.bnf.fr/fr/depot-legal-pour-quels-documents>

26) <https://www.bnf.fr/fr/le-depot-legal-numerique>

13) 독일

○ 독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3> 독일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on the German National Library DNBG, PflAV ²⁷⁾
규제 방식	- 독일도서관법(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 DNBG)과 법적 납본규제(Legal Deposit Regulation: PflAV)는 독일도서관 장서 수집의 근간, 동 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²⁸⁾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의무 납본은 매체의 종류나 출판 형태에 관계 없이 장서가 완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에서 물리적 매체에 미디어 자료를 출판하는 경우, 요청받지 않아도 무료로 2부를 독일국립도서관에 제출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는 1부만 제출, 디지털 납본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음 - 만약 출판물이 온라인과 물리적 형식으로 발행이 된다면 두 형식 모두 사본이 납본되어야 함
참고 사항	- 2006년 온라인 출판물을 포함하는 납본 의무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이 아닌 출판물(전자책, 전자 저널, 전자 종이, 디지털 오디오북, 음악 공연 또는 웹사이트 등)을 포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독일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²⁹⁾

27) <https://www.gesetze-im-internet.de/dnbg/index.html>

28) https://www.gesetze-im-internet.de/dnbg/_16.html

29) https://www.dnb.de/EN/Professionell/Sammeln/sammeln_node.html

14) 그리스

○ 그리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4> 그리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4452/2017 (Chapter B, Article 3A, Paragraph 2)
규제 방식	- 정부간행물은 납본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립문서센터 (National Documentation Centre)에 보관
디지털 간행물	- 그리스국립도서관 법적 납본에 관한 법(4452/2017)에 따르면 (3 α,2, p. 186-187) 물리적 혹은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납본 대상. 이에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일반적인 납본 방식으로 정부간행물을 납본 - 물리적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은 모두 같이 취급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그리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³⁰⁾

15) 헝가리

○ 헝가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5> 헝가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Hungarian Legal Deposit Legislation 195/2019 ³¹⁾
규제 방식	- 헝가리 법적 납본 법제 (Hungarian Legal Deposit Legislation: Government Decree 313/2018.(XII.27.))는 모든 출판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자료도 물리적 출판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간행물에도 그대로 적용 - 따라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이 공식적으로 발행될 때 헝가리 법적 납본 법제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며 국립세체니도서관 (National

30) <https://www.nlg.gr/static-page/kata-nomo-katathesi/>

	Széchenyi Library)에서 납본받아서 목록화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헝가리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³²⁾

16)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6> 아이슬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Regulations on Mandatory Returns to Museums 982/2003 ³³⁾
규제 방식	- 2002년부터 법적 납본에 관한 법 (nr. 20)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납본의 대상은 정부간행물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이 대상
디지털 간행물	- 법적 납본은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 혹은 디지털 출판물을 구분하지 않음 - 따라서 모든 형식으로 납본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의 인쇄 출판물을 아이슬란드 출판 프레스 (Icelandic Printing Presses)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디지털자료(예: PDF)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납본받거나 웹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아이슬란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³⁴⁾

31) <https://www.ppk.elte.hu/en/content/legal-deposit.t.41603>

32) <https://www.oszk.hu/kotelespeldanyok>

33) <https://island.is/reglugerdir/nr/0982-2003>

34) <https://landsbokasafn.is/index.php?page=e-material>

17)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7> 아일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³⁵⁾
규제 방식	- 납본 대상으로 정부간행물(Government Publications) 및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s)을 명시하여 납본 수행
디지털 간행물	- 최근 법 개정으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아일랜드국립도서관은 법적 납본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 아일랜드에서 출판되는 도서, 정기 간행물 및 신문을 대상으로 납본을 요청하여 수집 - 다양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PDF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수집 - 대부분은 정부 부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공, 국립도서관에서는 접근과 관련하여 온라인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사항	- 아일랜드국립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자료의 경우 법적 납본 대상이 아니었음 -- 아일랜드의 법적 납본에 관하여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의 섹션 198을 참조 (Copyright and Related Acts 2000, Section 198) ³⁶⁾ - 이 법률은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도 법적 납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2019년에 개정됨 ³⁷⁾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³⁸⁾

35)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0/act/28/enacted/en/html>

36)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0/act/28/section/198/enacted/en/html>

37)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19/act/19/enacted/en/html>

38) <https://www.nli.ie/collections/our-work-collections/collecting>

18)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8> 이탈리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106/2004 & Presidential Decree 252/2006 ³⁹⁾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행물은 일반적인 출판물 납본에 관한 법률 106/2004 및 대통령령 252/2006의 적용을 받음 - 법적 납본을 위한 자료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생산된 자료를 말하며 판매용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포(유료 및 무료)되며 사적인 맥락에서 발행된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252/2006의 37 c. 1에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된 자료의 법적 납본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권장되지도 않음 - 따라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 불가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의 경우 대중에게 처음 배포된 후 60일 이내에 한 부씩 피렌체국립중앙도서관과 로마국립중앙도서관에, 두 부는 지역 기록보관소에 제출 - 인쇄량이 200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분 면제를 받으며, 두 부만 각각 피렌체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기록보관소로 제출 - 지역 납본도서관은 MIBAC 장관령 28/12/2007에 의해 발행인이 소재한 지역 또는 저자가 자가 출판 저작물에 대해 거주하는 지역에 지정된 도서관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이탈리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⁴⁰⁾

39)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2004-04-15:106!vig=>

40) <https://www.bncf.firenze.sbn.it/biblioteca/deposito-legale/>

19) 일본

○ 일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19> 일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National Diet Library Law ⁴¹⁾
규제 방식	- 정부간행물은 국회도서관법 (National Diet Library Law)의 24조 및 24-2조에 명시된 법적 납본의 대상으로 규정
디지털 간행물	-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의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한 법적납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국회도서관법 단원 XI-2 및 XI-3 참조) - 따라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은 정부 부처, 기관, 대법원에 설치된 국회도서관 분관을 통해 납본이 이루어짐 - 정부 부처 내에 국회도서관의 분관을 활용, 정부 부처의 온라인 목록을 확인하여 납본되지 않은 출판물의 납본 유도 -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25-3조에 의거, 정부의 웹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웹 아카이빙 수행 - 수집된 웹사이트에 디지털 출판물이 있으면 추출하여 독립적인 도서관 자료로 다룸 ⁴²⁾
참고 사항	- 국가 혹은 지방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은 보상 없이 출판물을 납본해야 하며 ⁴³⁾ 지정된 수량의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의 간행물은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 공식적인 이용과 국제교류에 사용 - 국립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에 법적 납본 홍보물을 배포, 법적 납본 인식 제고에 노력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일본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⁴⁴⁾

41) <https://www.ndl.go.jp/en/aboutus/laws.html>

42) <https://www.ndl.go.jp/en/collect/internet/index.html>

43)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2366766/www.ndl.go.jp/en/cdnla0/newsletter/098/985.html>

44) <https://www.ndl.go.jp/en/collect/deposit/index.html>

20) 라트비아

- 라트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0> 라트비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Obligatory Copies Law ⁴⁵⁾
규제 방식	- 라트비아에서는 출판사를 출판회사, 비영리단체(NGO), 시·주 당국을 포함하는 법인과 개인으로 정의, 정부 기관도 포함
디지털 간행물	- 납본법에 따르면 온라인 간행물도 납본 대상이며,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 출판물이 물리적인 형태 및 디지털 형태로 동시 발간된다면 모두 수집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납본법 (Obligatory Copies Law)에 따르면 정부 기관을 포함한 출판사는 ISBN, ISMN, ISSN 부여와 상관없이 라트비아에서 발행되거나 라트비아에 등록된 출판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출판물, 회색문헌, 온라인 자료를 라트비아국립도서관에 제공 - 납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핸드북, 팜플릿, 통계 간행물 등과 같은 출판물은 모두 라트비아국립도서관에 납본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⁴⁶⁾

21)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1> 리투아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Order of Distribution of Legal Deposit Copies of Pub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to Libraries No.999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인 「출판물 및 기타 문서의 법적 납본에 관한 정부령」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45) https://lnb.lv/services/izdevejiem/#obligatie_eksemplari

46) https://lnb.lv/services/izdevejiem/#eobligatie_eksemplari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 기관은 국립도서관에 무료로 법적 납본을 제공, 국립 도서관 사서는 정부기관에 이메일로 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공지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⁴⁷⁾ 및 WIPO 설문 응답 ⁴⁸⁾

22)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2> 룩셈부르크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Grand-Ducal Regulation of November 6, 2009 relating to Legal Deposit ⁴⁹⁾
규제 방식	- 2004년 6월 25일 문화 기관에 관한 개정된 법률(Loi modifiée du 25 juin 2004 portant réorganisation des instituts culturels de l'Etat)과 2009년 11월 6일에 개정된 납본에 관한 대공작 규제 (règlement grand-ducal du 6 novembre 2009 relatif au dépôt légal)에 따르면 정부간행 물의 납본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적인 출판물과 같이 법적 납본 의무 존재 - 정부간행물 법적 납본은 편집자 본인 책임임을 의미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된 문서도 법적 납본의 대상, 납본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면 법적 납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도 일반적인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납본
참고 사항	- 행정기관 내부 생산 문서는 공공에게 출판된 문서가 아님으로 납본 대상이 안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룩셈부르크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⁵⁰⁾

47) <https://www.lnb.lt/leidejams/privalomojo-egzemplioriaus-pristatymas>

48)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copyright/en/registration/replies/pdf/lithuania.pdf>

49)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rgd/2009/11/06/n8/jo>

50) <https://guichet.public.lu/en/entreprises/sectoriel/culture/secteur-litteraire/depot-legal-bnl.html>

23) 멕시코

○ 멕시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3> 멕시코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General Library Law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 멕시코의 납본법은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내용을 담은 책, 브로슈어, 지도, 악보, 포스터, 잡지, 신문 및 기타 인쇄물 2부와 전자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된 작품 1부 납본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은 통상 인쇄물과 디지털 형식으로 납본, 지도와 통계는 디지털 형식으로만 납본. 일반 출판사의 디지털 도서와는 별도 관리 - 멕시코국립도서관은 정부간행물을 납본받아서 관리
참고 사항	-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간행물을 주기적으로 납본 받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멕시코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⁵¹⁾

24)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4> 네덜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납본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규제 방식	- 네덜란드의 경우 법적 납본이 아닌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도 자발적 납본 대상
디지털 간행물	- 자발적 납본시스템은 인쇄물 및 디지털 출판물,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납본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자발적 납본의 대상

51) <https://bnm.iib.unam.mx/index.php/quienes-somos/deposito-legal/lineamientos>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인쇄 및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을 납본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⁵²⁾

25)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5> 뉴질랜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Te Puna Mātauranga o Aotearoa) Act 2003 ⁵³⁾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otearoa New Zealand Legal Deposit Provisions을 바탕으로 법적 납본 규율 - 정부간행물 혹은 학위논문의 납본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나, 납본 의무를 갖는 대상으로 정부 기관을 규정 - 납본에 관한 기준은 다음 세가지 테스트를 충족 (i) 일반에 공표된 자료 이거나, (ii) 요청에 따라 대중이 이용할 수 있거나, (iii)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rn-Digital 출판물의 경우,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법정 보관 테스트를 충족하면 납본 - 전자출판물에 접근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직접 출판사에 사본 요청할 수 있음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각 정부 기관에 대해 다른 출판사 그룹에 대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요청 워크플로 사용 - 정부간행물의 경우 이들 자료를 납본할 의무는 정부기관에 있으며, 납본되지 않으면 출판사 요청(워크플로)을 사용하여 후속 조치를 취함 - 대다수의 정부 출판물은 기관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서 복사 가능.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새로운 정부간행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뉴스레터나 기타 알림 서비스에 가입 - 만약 기관이 적절한 알림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각 기관과 함께 출판물 알림을 받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만들어 활용할 것임

52) <https://www.kb.nl/uitgevers/opnamecriteria-depot-van-nederlandse-publicaties>

참고 사항	-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공공기록물(정부기록물)은 법적 납본 대상이 아님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⁵⁴⁾

26)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6> 노르웨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Regulations on the Obligation to Hand Over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⁵⁵⁾
규제 방식	- 노르웨이의 납본법은 정부간행물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된 모든 출판물을 대상 - 납본 대상으로 시, 군, 주 출판물 (Municipal, County and State Publications)을 포함하는 정부간행물 명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노르웨이 공공 및 재정관리 기관 (Norwegian Agency for Public and Financial Management)이 참여한 쿠도스(Kudos, 디지털형태 정부간행물 수집·제공 포털) ⁵⁶⁾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간행물 납본받음
참고 사항	- 현 납본법은 일부 종류의 자료에 대해서는 특정 형식의 납본을 제외함.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배포되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오직 디지털 버전만 납본 수집함. 노르웨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납본 포털 ⁵⁷⁾ 을 통해서 이루어짐 -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정부기관들에 정기적으로 간행물 납본 의무 공지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⁵⁸⁾⁵⁹⁾

53) <https://legislation.govt.nz/act/public/2003/0019/latest/DLM191962.html>

54)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legal-deposit>

55)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18-07-01-1139>

56) <https://kudos.dfo.no/>

57) <https://www.nb.no/tjenester/pliktavlevering/digital-avlevering/>

58) <https://www.nb.no/pliktavlevering/>

59) <https://www.nb.no/en/legal-deposit/>

27) 폴란드

○ 폴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7> 폴란드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Journal of Laws 2018, Article 545 ⁶⁰⁾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의 도서관 의무납본에 관한 1996년 11월 7일 법률 (Ustawa z dnia 7 listopada 1996 r. o obowiązkowych egzemplarzach bibliotecznych)⁶¹⁾ 2조는 출판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출판사는 폴란드 영토 내에서 출판하는 법인 혹은 자연인이거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을 말하며 정부 기관은 출판사에 포함됨 - 폴란드의 납본법은 정부간행물의 납본을 규제함. 폴란드 정부 간행물은 대부분 관보 (official journals) 형태로 출판되며, 16개의 도서관으로 배포, 오직 2부는 폴란드국립도서관과 Jagiellonian 도서관에 납본됨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납본법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정부간행물의 납본 규제 - 2012년부터 관보는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발간되며, 납본 규정에 의해서 납본됨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폴란드 공화국의 법률 저널 및 관보 2부를 국립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주 정부 기관들의 관보는 Sejm도서관에 한 부 배포됨 - 전자적 형태로 출판된 정부간행물의 경우 전자납본포털 (https://polona.pl/pdw)을 통해서 납본하며 POLONA digital library (https://polona.pl/)에 공유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이 제외되는 정부 문서 존재. 주 정부 기관이나 군 기관 내부 목적 자료(인쇄 전 명시되어야 함)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폴란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⁶²⁾

60)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19961520722/U/D19960722Lj.pdf>61)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19961520722/T/D19960722L.pdf>62) <https://www.bn.org.pl/dla-wydawcow>

28)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8> 포르투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Administrative Law (1982.3.3 74/82 & 1986.10.28. 362/86) ⁶³⁾
규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의 납본법은 정부간행물을 독립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을 의무화 함 - 특히 발행물이 포르투갈에서 편집되었거나, 해외에서 발행되었더라도 편집자가 포르투갈인일 때 납본 의무임 - 이러한 납본법의 정의는 다른 간행물과 함께 정부간행물을 포함
디지털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규정 및 인프라는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 납본 불가 - 포르투갈국립도서관은 1982년에 제정된 법적 납본법이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되는 정부간행물 및 논문의 납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다고 인정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 공공 접근,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포르투갈국립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국가 문화 및 지적 유산을 보존·접근하는 데 어려움 초래 - 새로운 납본법은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해야 하는지와 방법에 대한 명확히 제시 필요 - 현재 포르투갈국립도서관(BNP)은 디지털 출판물 수집·보존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함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적 납본의 프레임워크는 납본 대상 저작물의 형식과 매체에 대한 정의가 없고, 디지털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지 못함 - 즉, 현 납본법은 아직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로만 발행된 출판물과 관련된 복잡성 해결에 어려움 있음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포르투갈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⁶⁴⁾

63) <https://www.bnportugal.gov.pt/images/stories/servicos/documentos/dl36286.pdf>

64) http://www.bnportugal.gov.p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3&Itemid=63&lang=en

29)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9> 슬로바키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no. 265/2022 Coll. (Publications Act) ⁶⁵⁾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1년에 한 번씩 인쇄본만 수집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은 납본 불가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인쇄본 형태의 정부간행물을 모아서 국립도서관으로 송부
참고 사항	- 모든 정부간행물은 인쇄본 형태로 납본되고 관리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슬로바키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⁶⁶⁾

30)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0> 슬로베니아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Obligatory Copy of Publications Act (ZOIPub) ⁶⁷⁾
규제 방식	- 정부간행물을 포함한 슬로베니아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 - 납본 대상으로 공공자금(슬로베니아 공화국, 유럽 연합, 지역 공동체, 공적 자금, 공공기관 등의 자금) 지원되어 제작된 인쇄본 150부 이상인 공공간행물을 명시
디지털 간행물	- 2006년부터 법적 납본법은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출판물 포함하기 시작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설립된 출판사는 국립 및 대학도서관에 4부의 법적 납본을 보낼 의무가 있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2부,

65) <https://www.zakonypreludi.sk/zz/2022-265>

66) <https://www.snk.sk/sk/sluzby/v-sidelnej-budove/sluzby-vydavatelom/pokyny-pre-vydavatelov.html>

	공공자금을 조달하고 인쇄본이 150부 이상이면 16부) - 슬로베니아 국립도서관은 출판물을 2부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법적 납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도서관에 배포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슬로베니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⁶⁸⁾

31) 스페인

○ 스페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1> 스페인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aw 8/2022, of may 4, Modifies Law 23/2011, of July 29 Of Legal Deposit
규제 방식	- 공공간행물 납본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납본법으로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납본법 10.4조는 초판 2부를 납본해야 하며 디지털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디지털 파일도 납본 -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과 아카이빙은 Real Decreto 635/2015 규제 근거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출판업자는 납본사무소를 통해 제출, 이 중 2부는 스페인국립 도서관으로 보냄 - 공공간행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 (예: 관보 Official State Bulletin) 1부와 디지털 파일 제출, 디지털 파일이 없는 경우 2부 제출 - 납본 받은 정부간행물 2부 중 1부는 보존용, 다른 1부는 열람용
참고 사항	- 온라인 출판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출판되고 접근이 허용된다면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 수집 - 접근이 제한된 출판물 (요금이 있거나 혹은 비밀번호)의 경우 공개되고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저작물 수집을 위해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집

67) <http://www.pisrs.si/Pis.web/pregledPredpisa?id=ZAKO3606>

68)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obvezni-izvod>

69)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2-7311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스페인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⁶⁹⁾⁷⁰⁾
-----------	--

32) 스웨덴

○ 스웨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2> 스웨덴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조항	Act (1993:1392) on Mandatory Copies of Documents ⁷¹⁾
규제 방식	- 스웨덴 납본법은 명함, 양식, 포장과 같은 가치가 낮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출판물은 납본도서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 - 정부간행물도 출판물 일부로 납본되어야 한다고 규정 ⁷²⁾
디지털 간행물	- 스웨덴의 전자 법률은 정부간행물의 경우 인쇄 및 디지털 출판물 모두를 납본하도록 규정 ⁷³⁾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정부간행물은 일반적인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납본
참고 사항	- 디지털자료 포함, 여러 형식이면 장기 보존에 적합한 형식으로 납본할 것을 규정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스웨덴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⁷⁴⁾

70) <https://www.boe.es/eli/es/rd/2015/07/10/635/con>

71)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931392-om-pliktexempl_sfs-1993-1392/

72)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r1-forordning-1988377om_sfs-1988-377/

73)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fs_sfs-2012-492/

74) <https://www.kb.se/insamling-och-pliktleverans.html>

33) 스위스

- 스위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3> 스위스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납본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규제 방식	- 스위스의 경우 법적 납본이 아닌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도 자발적 납본의 대상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이 납본 가능한지 미확인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인쇄 및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을 납본
출처	- 미응답으로 관련 뉴스 참조 ⁷⁵⁾

34) 튀르키예

- 튀르키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4> 튀르키예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egal Deposit of Cultural Heritage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일반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도 납본
출처	- 미응답으로 튀르키예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참조 ⁷⁶⁾

75) <https://www.gbnews.ch/the-legal-deposit-keeping-the-printed-word-for-future-generations/>

76) <https://kasif.mkutup.gov.tr/DefaultEn.aspx>

35) 영국

○ 영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5> 영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⁷⁷⁾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대상 ⁷⁸⁾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 납본을 규제, 일반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 납본 수행
출처	- 영국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⁷⁹⁾

36) 미국

○ 미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6> 미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Copyright Law on Mandatory Deposit (17 U.S.C. section 407) ⁸⁰⁾
규제 방식	- 일반적인 납본 규정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 규제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미국 정부 출판물 사무소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에서 정부간행물 수집 담당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미국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⁸¹⁾

7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7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view=plain>

79) <https://www.bl.uk/help/how-to-deposit-your-print-publications>

80)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4.html#407>

81) <https://www.copyright.gov/mandatory/>

37) 중국

○ 중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37> 중국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납본 법 조항	납본법
규제 방식	- 공공도서관법의 '출판관리규정' 및 '정기간행물 출판관리규정'에 의거, 중국 내의 모든 공공간행물은 출판 시 3권씩 중국국가도서관에 납본
디지털 간행물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정부간행물도 납본 대상
정부간행물 납본/수집 방식	- 공공간행물은 출판 후 1개월 이내에 납본해야 하며 납본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도서 출판자 - 납본이 되지 않으면 독촉, 전체 독촉, 중앙 집중식 독촉 방법으로 납본 관리
출처	-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 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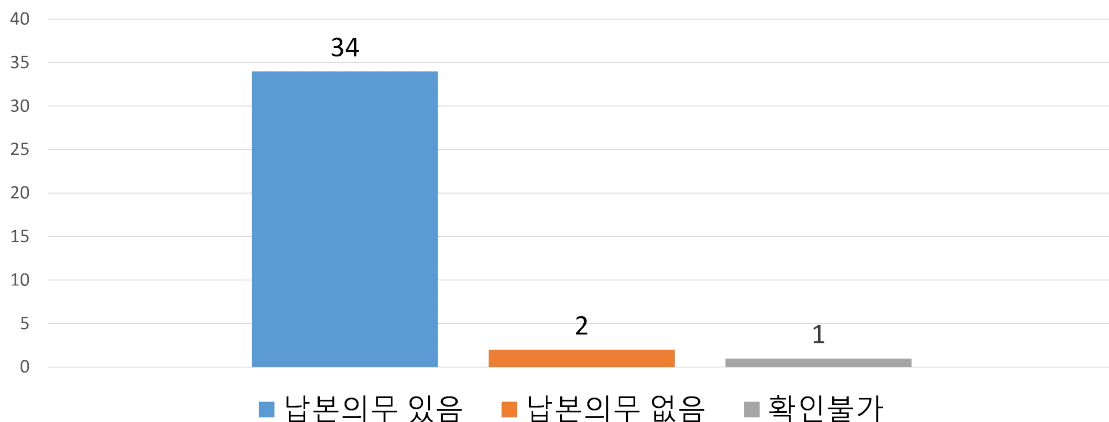
82) http://www.nlc.cn/web/dsb_footer/dsb_zcwm/dsb_cbwjs/dsb_jsdt/index.shtml

2.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가.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현황 일반

-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과 관련한 납본정책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각 국가의 국립도서관 납본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파악
- 주요 7개국을 포함하는 34개의 OECD 국가에서 정부간행물의 법적 납본과 관련한 정책을 유지
-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법적 납본이 아닌 자발적 납본정책을 유지

<그림 2-1>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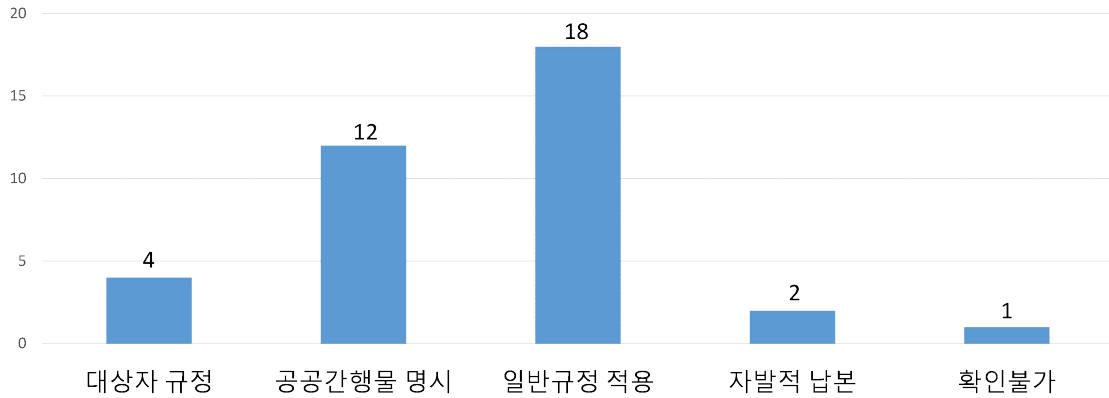


나.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종류

-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과 관련한 납본정책 종류 조사
- 정부간행물 납본을 규정하는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행물 법적 납본을 관리하고 있음
 - 대상자 규정: 납본의 주체를 정부 기관으로 명시
 - 공공간행물 명시: 납본의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Government/State/Municipal/County Publications)

- 일반규정 적용: 일반적인 납본 규정을 적용하며 실질적으로 수집
- 자발적 납본: 자발적 납본을 통한 수집 및 관리

<그림 2-2>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의 종류



<표 2-38> OECD 국가의 정부간행물 납본정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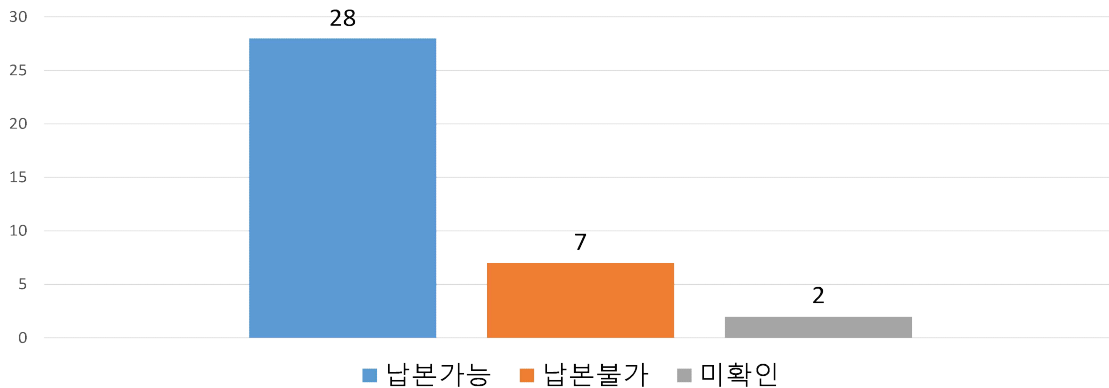
국가명	납본정책 종류	국가명	납본정책 종류
캐나다	대상자 규정	튀르키예	일반규정 적용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일반규정 적용	오스트리아	정부간행물 명시
콜롬비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체코	
프랑스		덴마크	
독일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일반규정 적용	네덜란드	자발적 납본
슬로바키아		스위스	
스페인		이스라엘	확인불가
스웨덴			

다.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 납본 여부

-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 납본 여부 조사
- 37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를 포함하는 28개 국가에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공공간행물도 납본 가능
 - 특히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은 최근의 법 개정으로 가능
 - 대부분 국가는 인쇄본과 디지털이 모두 존재하면 두 형식 모두 수집하지만, 일부의 국가는 가능한 디지털만 수집: 호주, 캐나다, 독일 등
-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7개 국가는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을 납본할 수 없음
 - 오스트리아: 물리적 출판물 및 저장 매체에 존재하면 납본 대상
 - 벨기에: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자발적으로만 운영
 - 이탈리아: 디지털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자료는 납본 미대상
 - 슬로바키아: 1년에 한 번만 인쇄본으로만 수집 중

<그림 2-3> 디지털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의 납본 여부



<표 2-39> 디지털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의 납본 여부

국가명	납본 여부	국가명	납본 여부
호주	가능	뉴질랜드	가능
캐나다		노르웨이	
칠레		폴란드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능
헝가리		벨기에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아일랜드		체코	
일본		이탈리아	
라트비아	미확인	포르투갈	미확인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미확인
네덜란드			

제2절 해외 학위논문 납본정책

1. 해외 납본정책 조사개괄

가. OECD 국가의 납본정책 현황

- OECD 국가 중 국립도서관이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집 제도, 특성, 현황을 조사
- OECD 국가 중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납본하는 국가의 납본 수집 담당자를 서면(이메일) 인터뷰하여 납본 수집 여부, 법적 근거, 필요성, 납본 절차를 파악
- 더불어 납본 기관, 발행현황 통보 시스템, 납본 인센티브, 저작권 양도 상황 조사

나. 주요 국가별 납본정책 현황

-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중국, 일본 7개 국가의 납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
 - 납본 관련 일반적 법제도, 정책 현황, 세부 절차를 조사하고 비교
 - 납본 대상 및 제외자료, 방법, 보상 여부 및 과태료, 저작권법과의 연계를 조사하고 비교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사
 - 특히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은 세부적으로 조사

다. 자료수집 시기 및 결과

○ 분석 대상

- 37개 OECD 국가의 납본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현황, 관련 사항 조사

○ 수집 시기

- 2023년 8월 중순(8/14) 1차, 9월 초(9/12) 2차, 10월말(10/30) 3차 연락

○ 수집 결과

- 2023년 11월 27일까지 총 33개의 나라에서 응답하여 분석에 활용
- 나머지 4개 국가(칠레, 이스라엘, 스위스, 튀르키예)는 웹사이트 및 문헌 조사로 대체

라. OECD 국가별 정부간행물 납본정책

1) 호주

- 호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0> 호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UNSWorks을 활용하여 대학 연합이 자체적으로 학위논문을 관리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호주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⁸³⁾		

83) <https://www.nla.gov.au/using-library/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1> 오스트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은 학위논문을 인쇄 및 디지털 형식 모두 발행		
납본/수집 방식	-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원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제출은 대학조직법 (University Organisation Act: Universitätsgesetz, 2002) ⁸⁴⁾ 로 규제 - 대학조직법 (Universitätsgesetz)에 따르면 학위 수여를 위해 학위논문 제출이 선결 요건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3) 벨기에

○ 벨기에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2> 벨기에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박사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납본		
납본/수집 방식	- 박사 학위논문만 납본 대상, 석사학위논문은 납본 미대상		
참고 사항	-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벨기에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⁸⁵⁾		

84)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02128>

4) 캐나다

○ 캐나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3> 캐나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수집 대상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학원 학위논문의 경우 오직 디지털 자료 (Born-Digital Versions)만을 수집함		
납본/수집 방식	- 캐나다에서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논문은 법적 납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납본을 규제하는 법률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의 납본 제외 대상 (Deposit on Request Exception: Section 4(m))으로 명시 - 다만 요청이 있을 때만 학위논문을 납본할 수 있음 - 대학원 학위논문이 납본의 의무는 없지만, 논문 캐나다 프로그램 (Theses Canada Program) ⁸⁶⁾ 에 참여하는 캐나다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위논문을 수집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캐나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⁸⁷⁾⁸⁸⁾		

5) 칠레

○ 칠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4> 칠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85) <https://www.kbr.be/nl/wettelijk-depot/overzicht-van-de-regels-inzake-het-wettelijk-depot/>

86)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services-libraries/theses/Pages/theses-canada.aspx>

87)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Pages/about-legal-deposit.aspx>

88)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services-libraries/theses/Pages/information-universities.aspx>

납본/수집 방식	- 칠레에서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이 아니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리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6) 콜롬비아

○ 콜롬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5> 콜롬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자발적 납본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납본/수집 방식	-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은 법적 납본의 대상이 아니나, 이들 학위논문은 국립도서관에 자발적으로 납본할 수 있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콜롬비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⁸⁹⁾		

7)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6> 코스타리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학부/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학위논문은 오직 디지털 형식으로만 납본		
납본/수집 방식	- 학부 및 대학원 논문(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Theses)을 납본의 대상으로 보며 오직 전자 형식으로만 납본 - 각 대학 역시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보존할 책임이 있음		

89) <https://bibliotecanacional.gov.co/es-co/servicios/profesionales-del-libro/deposito-legal/preguntas-frecuentes>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코스타리카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⁰⁾
----	---

8) 체코

○ 체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7> 체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납본/수집 방식	- 정부 출판물과 학위논문은 회색 문헌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러한 회색문헌의 법적 납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서관은 이들 문서 유형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수집하고 있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9) 덴마크

○ 덴마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8> 덴마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납본/수집 방식	- 공개된 서면 자료(Written Material)는 법적 납본의 대상이며 이는 석박사 학위논문도 포함하고 있음		

90) <https://www.sinabi.go.cr/servicios/DepositolegalCostaRica.aspx>

91) <https://pro.kb.dk/en/legal-deposit/questions-and-answers-about-legal-deposit>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덴마크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¹⁾
----	---

10)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49> 에스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납본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납본 대상으로 삼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1) 핀란드

○ 핀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0> 핀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학위논문 역시 법적 납본의 대상임		
납본/수집 방식	- 대학원 학위논문은 모두 법적 납본법(Legal Deposit Law)이 적용되며 학부 학위논문은 법적 납본의 대상이 아님 - 대학원 학위논문은 모두 다른 출판물과 같은 방식으로 납본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2) 프랑스

○ 프랑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1> 프랑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별도 수집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생산하나 교육부 법에 따라 운영 하는 기관저장소는 디지털로만 보관		
납본/수집 방식	- 공공에 공개되지 않는 학위논문의 경우는 법적 납본의 대상이 아니나, 만약 이들 학위논문이 출판된다면 이들은 일반 출판 물과 마찬가지로 납본되어야 함 - 학위논문은 교육부 법에 따라서 기관저장소에 디지털로 보관 (PSL ADUM, 인스티튜트 폴리테크닉 드 파리)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프랑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²⁾		

13) 독일

○ 독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2> 독일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학위논문이 여러 형식일 경우 디지털자료만 납본		
납본/수집 방식	-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은 납본의 대상임 - 일반적으로 온라인 출판물은 독일국립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내용의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도 함께 존재한다면, 온라인 출판물만 제출함 - 다만,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출판물이 물리적 형태로만 배포		

92) <https://www.bnf.fr/fr/depot-legal-pour-quels-documents>

	될 때는 2부의 의무 사본을 납본해야 함 (이때 출판된 사본의 수는 중요하지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독일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³⁾

14) 그리스

○ 그리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3> 그리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납본/수집 방식	- 학위논문은 법적 납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립도서관의 내부 정책으로도 학위논문은 책처럼 출판되지 않는 한 납본하지 않고 있음 - 학위논문은 석사/박사 학위 심사의 일부로 일반적인 출판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5) 헝가리

○ 헝가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4> 헝가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93) https://www.dnb.de/EN/Professionell/Sammeln/sammeln_node.html#sprg314524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법적 납본 법제 (Hungarian Legal Deposit Legislation)는 모든 출판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석박사 학위논문은 몇 개의 사본만 제작되기에 출판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헝가리 법적 납본 법제에서 다루지 않고 있음 -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헝가리 대학 도서관에서 수집을 담당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6)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5> 아이슬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는 2002년부터 법적 납본에 관한 법 (nr. 20)을 가지고 있으며 납본 대상 여부 대상은 학위논문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이 대상임 - 학위논문의 경우 아이슬란드 대학으로부터 대부분 PDF 형식으로 수집하여 학위논문 보관소(www.skemman.is)에 보존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7)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6> 아일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납본/수집 방식	-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을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학위논문은 개별 대학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8)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7> 이탈리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학위논문은 대부분 디지털 형식으로 납본 - 현재 종이 논문이나 CD나 DVD에 저장하는 사례는 미미하며 절대적으로 권장되지 않음		
납본/수집 방식	- 오직 박사 학위 논문은 법률 382/1980 및 후속 개정 사항에 따라 두 국립도서관에 납본되어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CD나 DVD로 자료를 보내는 것에서 나아가 2010년부터 대학에서는 OAI-PMH 프로토콜을 통해 기관저장소에서 직접 Magazzini Digitali 제출 서비스에 참여하여 자동 수집을 통해 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이탈리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⁴⁾⁹⁵⁾		

19) 일본

○ 일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8> 일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별도수집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박사학위논문은 문부과학성 고시에 따라 2013년 3월 이전에는 인쇄물로 출판이 되었으나 2013년 4월 이후에는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이 됨 - 인쇄물은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고시(1975년 3월 18일 자 교육부 훈령 제150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는 학위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장관령 시행 고시(2013년 3월 11일자 교육부 훈령 제937호)에 따라 발행됨 - 국립국회도서관은 인쇄물과 디지털자료 모두 수집함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이 아니라 문부과학성의 운영규칙 고시에 따라 별도수집 대상임 - 국회도서관은 박사학위 논문만을 수집하며 학부/석사학위논문은 수집하지 않음 (단 상업적 경로로 배포되는 학부/석사학위논문은 수집함) - 박사학위논문 수집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른 법적납본제도가 아닌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의 학위에 관한 장관령(Ministerial Ordinance on Degrees)의 운영규칙 고시에 근거하여 실시 - 위에 언급된 두 개의 고시에 따라서 박사 학위 수여자는 대학교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대학들은 이들 박사학위논문을 국립국회도서관에 제출함 - 디지털자료는 각 기관저장소에 보관되고, 국립국회도서관은 주기적으로 이들 저장소로부터 박사학위논문을 수집하고 있음 - 국립국회도서관은 박사학위 수여자가 아닌 대학으로부터 직접 박사학위 논문을 수집함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일본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⁹⁶⁾ 		

94) <https://www.bncf.firenze.sbn.it/biblioteca/magazzini-digitali/>

95) <https://www.depositolegale.it/istruzioni-tecniche-per-il-deposito-delle-tesi/>

20) 라트비아

○ 라트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59> 라트비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및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모두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인쇄본만 납본하나 디지털 형식의 논문도 추후 수집 예정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법에 따르면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은 석박사 학위논문과 그들의 요약본을 수집함 - 학위논문의 납본도 다른 출판물의 납본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학위논문의 경우 라트비아 과학 아카데미(Latvian Academy of Sciences)에서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에 게재가 되며 이를 확인하여 납본을 통제함 - 현재 학위논문은 디지털 형태로 수집되지는 않으나 많은 대학은 이미 그들의 학술 저장소에 논문을 보관하고 있음 - 대학들의 학술 저장소에 보관된 자료들을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의 학술 저장소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예정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⁹⁷⁾ 		

21)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0> 리투아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초록만)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작성자(학생)

96) <https://www.ndl.go.jp/en/aboutus/laws.html>97) https://lnb.lv/services/izdevejiem/#obligatie_eksemplari

디지털 논문	- 대학 대부분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학위 논문작성자는 국립도서관에 학위논문의 초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증을 국립도서관에서 발급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22)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1> 룩셈부르크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납본/수집 방식	- 현재의 납본 규정 제3조는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생산된 석박사 학위논문은 납본의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석박사 학위논문의 납본은 학위논문의 작성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은 대학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학위논문의 완전한 수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학위논문의 경우 ISBN을 발급받을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23) 멕시코

○ 멕시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2> 멕시코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미확인		
납본/수집 방식	- 멕시코의 일반도서관법(General Law of Libraries)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납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석박사 학위논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24)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3> 네덜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자발적 납본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법적 납본이 아닌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운영 - 자발적 납본시스템은 인쇄물 및 디지털 출판물,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납본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⁸⁾		

98) <https://www.kb.nl/uitgevers/opnamecriteria-depot-van-nederlandse-publicaties>

25)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4> 뉴질랜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논문의 물리적 사본은 일반적으로 대학이 사본을 배포(공개)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납본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됨 - 따라서 뉴질랜드의 경우 학위논문의 납본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 만약 대학이 디지털 버전의 논문을 공개할 때는 법적 납본의 범위에 속하지만, 현재는 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26)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5> 노르웨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현재의 납본법은 일부 종류의 자료에 대해서는 특정 형식의 납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배포되는 학위논문의 경우 오직 디지털 버전만 납본하고 수집하며 국립도서관은 모든 노르웨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납본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짐 - 노르웨이의 납본법은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된 문서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식으로 납본하도록 규제함
납본/수집 방식	- 노르웨이의 납본법은 박사학위논문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납본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대학들에 이들을 국립도서관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이것은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단과대학으로부터 이루어짐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⁹⁹⁾

27) 폴란드

○ 폴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6> 폴란드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		
납본/수집 방식	- 현재의 납본법은 학위논문의 납본을 강제하지는 않음 - 학위논문의 경우 국립도서관에 납본되는 것은 아니며 대신 대학의 아카이브에 전자적 형태 혹은 인쇄본의 형태로 납본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99) <https://www.nb.no/tjenester/pliktavlevering/digital-avlevering/>

28)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7> 포르투갈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형식으로 발행된 박사학위논문만 납본		
납본/수집 방식	- 현행 납본법은 박사 학위 논문의 납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은 대학 기관저장소로 위임 - 박사학위논문의 법적 납본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논문이 국립도서관에 보존되고 나아가 미래에도 접근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국립도서관에 학위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음		
참고 사항	- 기존의 법적납본의 프레임워크는 납본 대상 저작물의 형식과 매체에 대한 정의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출판물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지 못함 - 따라서 현재 법적 납본법은 아직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로만 발행된 출판물과 관련된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형식, 공공 접근,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국립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국가 문화 및 지적 유산을 보존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함 - 포르투갈국립도서관 역시 1982년에 제정된 법적 납본법이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한 논문의 납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인정 - 새로운 납본법은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해야 하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포르투갈국립도서관(BNP)은 디지털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포르투갈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⁰⁰⁾		

29)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8> 슬로바키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별도수집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석박사 학위논문은 오직 전자 형태로만 발행 및 수집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에 따르면 대학 자체 및 별도기관 수집 - 대학들은 정부 기관인 Center of Science-Technical Information (CVTI) 라는 곳으로 학위논문을 전자형식으로 제출하며 CVTI는 석박사 학위논문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30)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69> 슬로베니아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 2023년부터 슬로베니아 대학과 협업하여 디지털로 학위논문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일부 논문은 슬로베니아 디지털 도서관 포털 (dLib.si - doktorska disertacija)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¹⁰⁰⁾ 		
납본/수집 방식	-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설립된 출판사는 국립 및 대학도서관에 4부의 법적 납본을 보낼 의무가 있음 (학위논문은 2부, 공공		

100) https://www.bnportugal.gov.p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3&Itemid=190&lang=en

	자금을 조달하고 인쇄본이 150부 이상이면 16부)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슬로베니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⁰²⁾

31) 스페인

○ 스페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0> 스페인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가능하다면 인쇄 및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납본/수집 방식	- 학위논문의 납본을 규정하는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납본법으로 규제됨 - 학위논문의 납본으로 제출받은 두 개의 사본 중 하나는 보존용이고 다른 하나는 열람용으로 제공함 - 학위논문은 대학의 개방형 저장소에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학위논문 모음을 위한 웹 아카이브가 존재하지는 않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101)

<http://www.dlib.si/results/?euapi=1&query=%27keywords%3ddoktorska+disertacija%27&sortDir=ASC&sort=date&pageSize=25&fyear=2022&language=eng>

102)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obvezni-izvod-elektronski-spletni-nosilci-zapisa>

32) 스웨덴

○ 스웨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1> 스웨덴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납본 가능		
납본/수집 방식	- 학위논문도 출판물 일부로 납본도서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함 - 디지털로 발행된 학위논문도 모두 납본의 대상이며 납본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33) 스위스

○ 스위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2> 스위스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대학 자체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 대학이 인쇄 및 디지털 형식 모두 수집		
납본/수집 방식	- 납본이 의무가 아니며 대학 차원에서 학위논문을 관리		
출처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34) 영국

○ 영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3> 영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수집대상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 British Library에서 수집하는 학위논문도 디지털 형식 위주		
납본/수집 방식	- 영국의 납본법은 석박사 학위논문의 납본을 규제하지 않음 - 석박사 학위논문은 납본대상은 아니지만, 국립도서관의 수집 대상으로 관리 - 각 대학은 기관저장소에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하고 이는 British Library가 운영하는 EThOS (Electronic Theses Online Service)에 의해서 수집 - EThOS는 영국의 대학들로부터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출처	- 옥스포드대학교 웹사이트 ¹⁰³⁾ 및 Gould, S. (2016) ¹⁰⁴⁾		

35) 미국

○ 미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4> 미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미대상	관리 방식	수집대상
대상 논문	-	납본 주체	-
디지털 논문	- 대부분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103) <https://libguides.bodleian.ox.ac.uk/digitaltheses/hardcopytheses>

104) Gould, S. (2016). UK theses and the British Library EThOS service: from supply on demand to repository linking.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4(1), 7-13.

<https://www.proquest.com/docview/1761041481?sourcetype=Scholarly%20Journals>

납본/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저작권법은 석박사 학위논문의 납본을 규제하지 않음 - 박사 학위논문은 납본대상은 아니지만, 국립도서관의 수집대상으로 관리 (학사 및 석사 학위 논문 제외)¹⁰⁵⁾ - 각 대학은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ProQuest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출된 학위논문은 ProQuest에서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으로 Library of Congress에 제출 및 수집 - Library of Congress는 현재 수집만 진행하며 원문 서비스는 ProQuest에 의해서 제공 - 단 ProQuest와 Library of Congress간의 협약으로 ProQuest가 학위논문의 원문제공서비스를 중단할 시 학위논문의 원문을 Library of Congress에 제공하여 원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대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 담당자의 이메일 답변 - Crews (2013)¹⁰⁶⁾ & 미국의회도서관 장서수집정책¹⁰⁷⁾

36) 중국

○ 중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75> 중국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납본 대상 여부	대상	관리 방식	국립도서관
대상 논문	석박사	납본 주체	대학교
디지털 논문	-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납본/수집 방식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 학위 논문은 납본의 의무가 있음		
출처	- 중국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¹⁰⁸⁾		

105) Library of Congress (2019).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Dissertations and theses. Accessed on November 1, 2023: <https://www.loc.gov/acq/devpol/theses.pdf>

106) Crews, K. D. (2013). Copyright and your dissertation or thesis: Ownership, fair use, an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cessed on November 1, 2023: https://grad.tamu.edu/getmedia/9e36e009-416e-4002-8768-4f37a2bf2986/copyright_dissthesi_ownership.pdf

107) Library of Congress (2019).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Dissertations and theses. Accessed on November 1, 2023: <https://www.loc.gov/acq/devpol/these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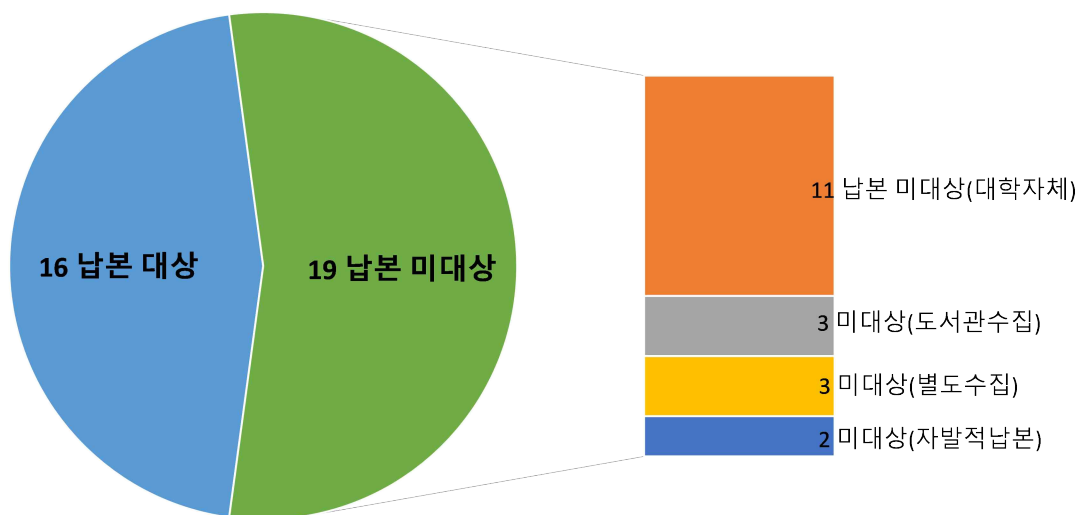
108) <https://www.nlc.cn/newen/su/ldop/bold/>

2.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가.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일반

- OECD 37개 국가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납본정책의 존재 여부를 각 국가의 국립도서관 납본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 학위논문 납본정책이 확인 가능한 35개 OECD 국가 중 16개의 국가는 학위 논문을 납본대상으로 관리
- 상기 35개 OECD 국가 중 19개 국가는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이 아니나 각 국가들은 별도의 정책으로 학위논문을 관리
 -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포함 11개 국가
 - 국립도서관의 수집대상: 캐나다, 영국, 미국 포함 3개 국가
 - 별도기관의 수집대상: 프랑스, 일본, 슬로바키아 포함 3개 국가
 - 자발적 납본 대상: 콜롬비아, 네덜란드 2개 국가

<그림 2-4>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표 2-76>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정책

국가명	납본대상 유무	학위논문 관리	대상 논문	납본주체
호주	미대상	대학자체		
오스트리아	미대상	대학자체		
벨기에	대상		박사	대학교
캐나다	미대상	수집대상		
칠레	미대상	대학자체		
콜롬비아	미대상	자발적 납본		
코스타리카	대상		학부/석박사	대학교
체코	미대상	대학자체		
덴마크	대상		석박사	대학교
에스토니아	대상		석박사	대학교
핀란드	대상		석박사	대학교
프랑스	미대상	별도수집		
독일	대상		석박사	대학교
그리스	미대상	대학자체		
헝가리	미대상	대학자체		
아이슬란드	대상		석박사	대학교
아일랜드	미대상	대학자체		
이스라엘	미확인	-		
이탈리아	대상		박사	대학교
일본	미대상	별도수집		
라트비아	대상		박사	대학교
리투아니아	대상(초록만)		석박사	작성자(학생)
룩셈부르크	대상		석박사	대학교
멕시코	미대상	대학자체		
네덜란드	미대상	자발적 납본		
뉴질랜드	미대상	대학자체		
노르웨이	대상		박사	대학교
폴란드	미대상	대학자체		

포르투갈	대상		박사	대학교
슬로바키아	미대상	별도수집		
슬로베니아	대상		박사	대학교
스페인	대상		석박사	대학교
스웨덴	대상		석박사	대학교
스위스	미대상	대학자체		
튀르키예	미확인	-		
영국	미대상	수집대상		
미국	미대상	수집대상		

나. 학위논문 납본 책임

- 학위논문을 납본대상으로 삼고 있는 16개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는 대학을 학위논문 납본의 책임자로 규정
- 리투아니아는 학위논문 납본의 책임자를 학생으로 규정하며 학생은 초록을 국립도서관에 납본할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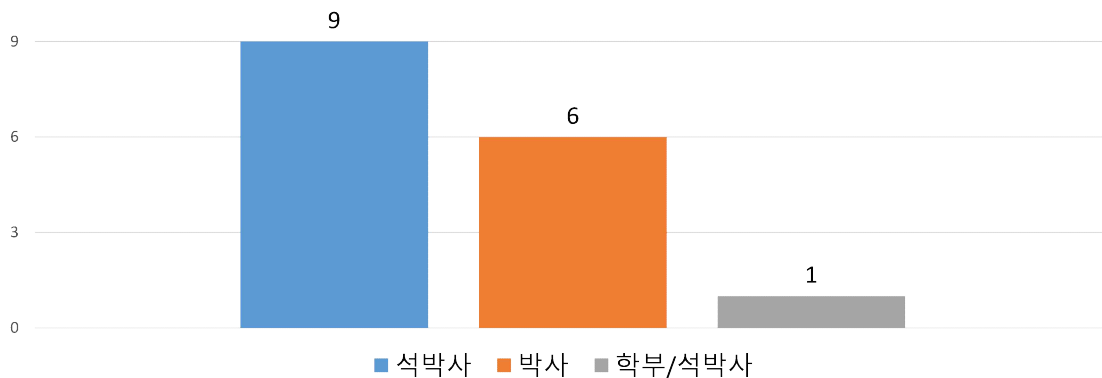
<표 2-77> 학위논문의 납본 책임자

국가명	납본 책임자	국가명	납본 책임자
덴마크	대학교	벨기에	대학교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독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코스타리카	
스웨덴		리투아니아	작성자(학생)

다. 납본대상 학위논문의 종류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8개 국가는 석박사 학위논문이 납본대상
- 벨기에,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5개 국가는 박사 학위논문만 납본대상

<그림 2-5> 납본대상 학위논문의 종류



<표 2-78> 납본대상 학위논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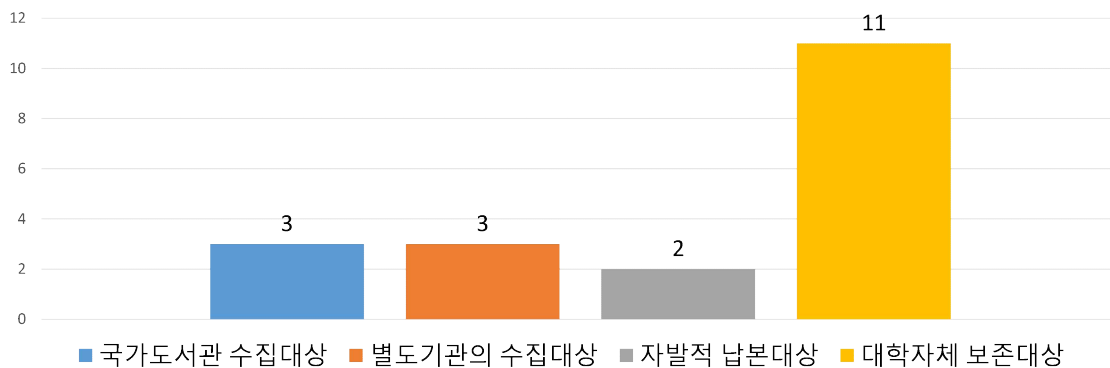
국가명	납본 학위논문 종류	국가명	납본 학위논문 종류
덴마크	석박사	스웨덴	석박사
에스토니아		벨기에	박사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코스타리카	학부/석박사

라.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

- 학위논문이 납본대상 아닌 19개 국가의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을 조사

- 캐나다, 영국, 미국은 학위논문이 법적 납본의 대상은 아니나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수집대상으로 관리
-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교육부와 문부과학성에서 수집 및 관리하며 슬로바키아는 Center of Science & Technical Information에서 수집
- 호주 외 10개 국가는 학위논문이 국립도서관의 납본대상은 아니나 대학 자체적 보존대상으로 관리

<그림 2-6>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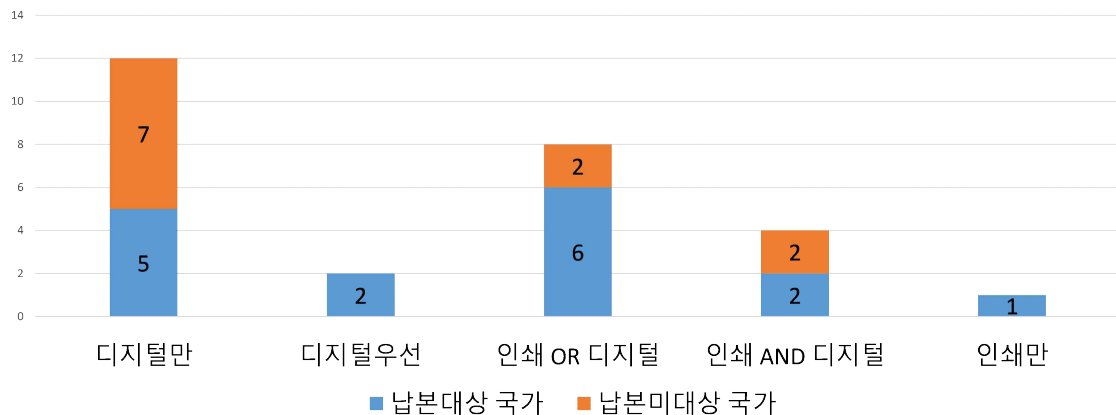
<표 2-79>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수집/보존 방식

국가명	수집/보존 방식	국가명	수집/보존 방식
캐나다	국가도서관 수집대상	칠레	대학 자체 보존대상
영국		체코	
미국		그리스	
프랑스	별도기관의 수집대상	헝가리	
일본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콜롬비아	자발적 납본대상	뉴질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학 자체 보존대상		

마.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발행정책

- OECD 국가에서 학위논문을 인쇄 형식과 디지털 형식 중 어떠한 형식으로 발행하는지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인 국가와 미대상인 국가로 나누어 조사
- 주요 국가에서 학위논문은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하거나 디지털이 우선하고 있으며, 22개 국가가 디지털 학위논문으로만 발행 가능

<그림 2-7> OECD 국가의 학위논문 발행정책



- 학위논문 납본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형식
 - 16개 국가 중 7개 국가는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만 받거나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우선하여 납본받음
 - 독일과 이탈리아는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에 우선하여 납본
 - 6개 국가는 인쇄 혹은 디지털 형식으로 학위논문을 납본할 수 있으며, 2개의 국가만 두 형식 모두 납본대상으로 접근

<표 2-80> 학위논문 납본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형식

국가명	납본방식	국가명	납본방식
벨기에	디지털만	덴마크	인쇄 OR 디지털
코스타리카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독일	디지털우선	스웨덴	인쇄 AND 디지털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인쇄만	스페인	

바. 학위논문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발행/수집 형식

-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은 학위论문을 오직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하고 관련 기관 역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으로 관리
- 프랑스는 디지털 혹은 인쇄 형식으로 학위论문을 발행 및 관리
- 오직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만 두 가지 형식 모두로 발행 및 관리

<표 2-81> 학위논문 미납본 국가의 학위논문 관리 형식

국가명	납본방식	국가명	납본방식
호주	디지털만	스위스	인쇄 AND 디지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미확인
캐나다		체코	
영국		그리스	
미국		헝가리	
네덜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인쇄 OR 디지털	멕시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사. 10대 주요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및 수집/보존 방식

-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순위 기준 상위 100대 대학을 보유한 상위 10개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및 수집/보존 방식을 조사
- 이들 10대 국가들 중 중국과 독일만 학위논문을 법적 납본대상으로 관리
-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국가도서관의 중요 수집대상으로 관리
- 일본과 프랑스는 문무과학성 및 교육부의 규정을 통하여 별도의 수집대상으로 관리하며 일본의 경우 학위논문의 수집을 국회도서관이 담당
-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는 학위논문을 납본하지 않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보존

<표 2-82> 10대 주요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및 수집/보존 방식

국가	대학수	납본대상 유무	수집/보존 방식
미국	31	수집대상	디지털만
영국	17	수집대상	디지털만
중국	12	납본대상	디지털만
호주	7	대학자체 보존	디지털만
일본	5	별도수집(문무과학성)	디지털만
프랑스	4	별도수집(교육부)	인쇄 OR 디지털
네덜란드	3	대학자체 보존	디지털만
독일	3	납본대상	디지털우선
스위스	3	대학자체 보존	인쇄 AND 디지털
캐나다	3	수집대상	디지털만

제3절 시사점

1. 해외 정부간행물 발행정책 시사점

- 주요 7개국을 포함한 34개의 OECD 국가들은 정부간행물의 법적납본과 관련한 실질적 정책을 유지하여 정부간행물을 납본 받음
- 37개의 OECD 국가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를 포함하는 28개의 국가에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공공간행물도 납본 가능
-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디어 형식이 인쇄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서 관련 법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자료를 납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7개 국가는 현재의 납본제도가 디지털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을 납본할 수 없으나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납본제도 개선을 추진 중

2. 해외 학위논문 발행정책 시사점

-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16개의 OECD 국가들은 학위논문을 국립도서관의 중요한 납본대상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학위논문을 납본 대상으로 삼고 있는 16개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는 대학을 학위논문 납본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대학도서관을 포함하는 대학 내의 기관에서 직접 납본을 수행
- 미국, 캐나다, 영국은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이 아니지만 국립도서관의 중요한 수집대상으로 관리하며, 일본 역시 문무과학성 고시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이 수집대상으로 관리
-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는 학위논문을 각각 교육부와 Center of Science & Technical Information에서 주요 수집대상으로 관리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하는 14개 OECD 국가들은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하거나 디지털 형식이 우선하며, 이를 포함한 22개의 국가에서 학위논문은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 가능
- THE 세계대학순위 기준 상위 100대 대학을 보유한 상위 10개 국가 중 7개의 국가에서 학위논문을 납본대상(중국, 독일), 국립도서관 수집대상(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혹은 별도기관 수집대상(프랑스)으로 관리

제3장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조사

제1절 |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제2절 | 국내 학위논문 납본현황

제3절 | 시사점

제3장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조사

제1절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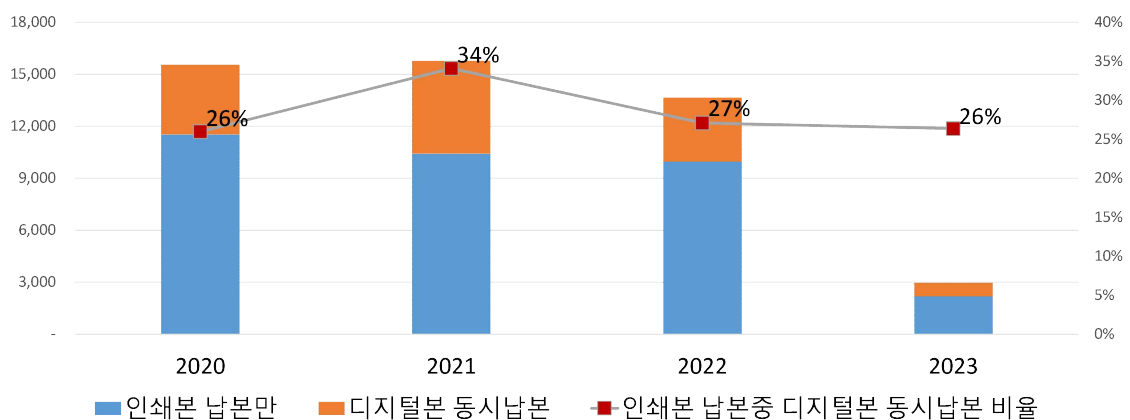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 발간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공공간행물이 실질적으로 납본·수집되었는지를 조사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공공기관 발간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공공간행물이 실질적으로 납본·수집되었는지를 조사
- 공공간행물을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의 납본 현황,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분석
 -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2. 공공간행물의 납본현황

가.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의 납본현황 조사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간행물의 인쇄본만 납본하는 건수는 2020년 11,521건에서 2021년 10,405건, 2022년 9,961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
- 하지만 이렇게 납본된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중 디지털 형식도 함께 납본된 비율은 2020년 26%, 2021년 34%, 2022년 27%임

<그림 3-1>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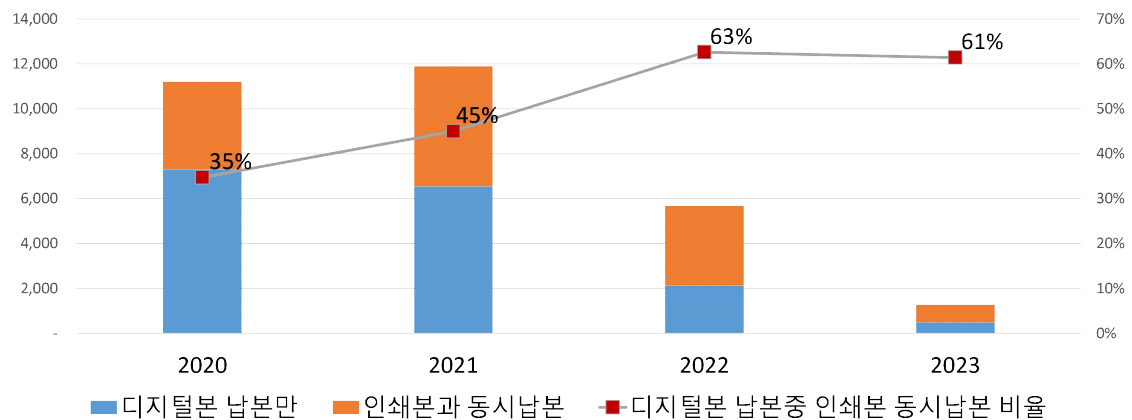
<표 3-1> 인쇄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납본만	11,521	10,405	9,961	2,185
디지털본 동시 납본	4,039	5,377	3,699	782
전체 인쇄본 납본 수	15,560	15,782	13,660	2,967
인쇄본 납본 중 디지털본 동시 납본 비율	26%	34%	27%	26%

나.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의 납본현황 조사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간행물의 디지털본 납본은 2020년 11,212건에서 2021년 11,894건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
- 이렇게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중 인쇄 형식도 함께 납본된 비율은 2020년 35%, 2021년 45%, 2022년 63%로 확실한 증가 추세

<그림 3-2>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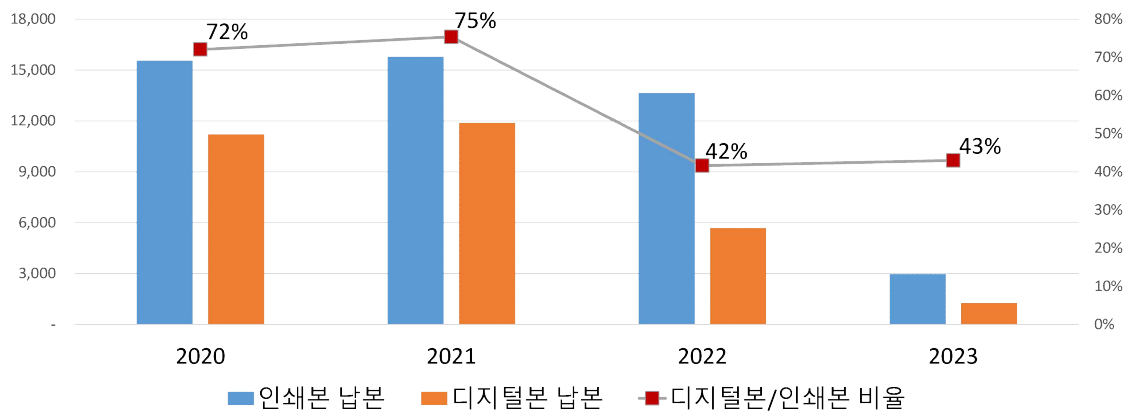
<표 3-2>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디지털본 납본만	7,317	6,542	2,125	492
인쇄본과 동시 납본	3,895	5,352	3,560	783
전체 디지털본 납본 수	11,212	11,894	5,685	1,275
디지털본 납본 중 인쇄본 동시 납본 비율	35%	45%	63%	61%

다.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 국립중앙도서관에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을 조사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의 비율이 72%에서 75%로 다소 증가 (발행년 기준)
- 2022년과 2023년은 납본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의 비율 증가 예상

<그림 3-3>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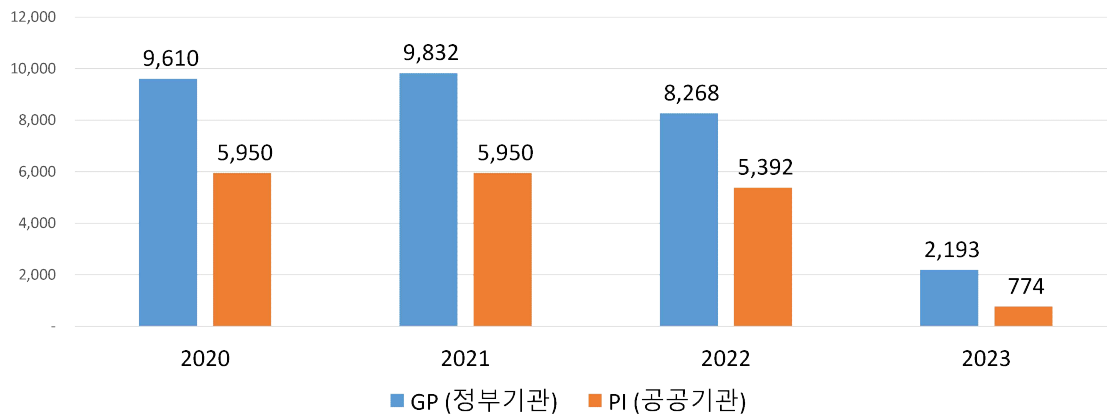
<표 3-3>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납본	15,560	15,782	13,660	2,967
디지털본 납본	11,212	11,894	5,685	1,275
디지털본/인쇄본 비율	72%	75%	42%	43%

라.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을 조사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은 연간 각각 15,560건과 15,782건의 인쇄본을 납본 (2022년은 13,660건의 인쇄본을 납본)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기관 대비 공공기관의 인쇄본 납본 비율은 60% 내외를 유지 (2023년 10월 현재 이 비율은 35%임)

<그림 3-4>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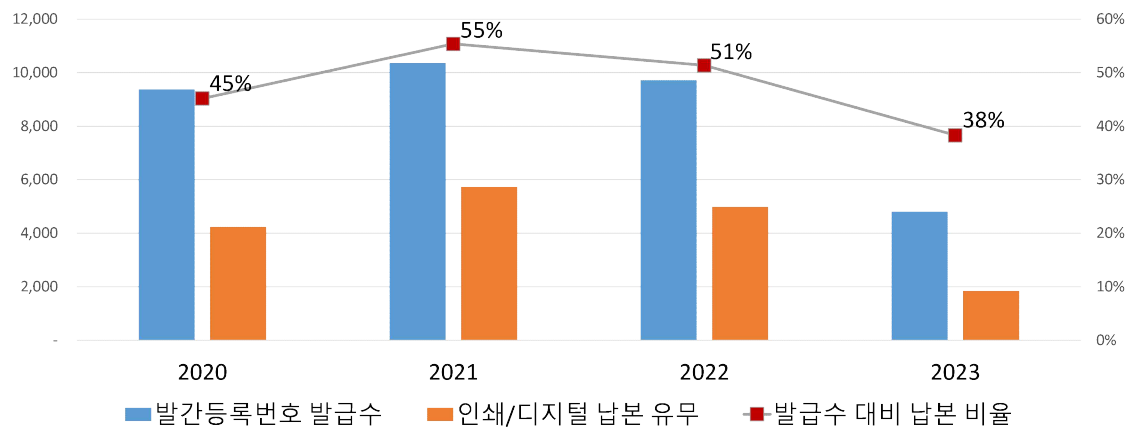
<표 3-4>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별 인쇄본 납본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GP (정부기관)	9,610	9,832	8,268	2,193
PI (공공기관)	5,950	5,950	5,392	774
합계	15,560	15,782	13,660	2,967

마.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 국가기록원에서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급받은 발간등록번호 대비 국립중앙도서관에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비율을 조사
-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공공간행물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납본 비율은 2020~2022년에 45%에서 55% 사이를 유지
- 2020년부터 2021년의 공공간행물의 경우 납본 완료를 전제로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은 55% 이하로 저조

<그림 3-5>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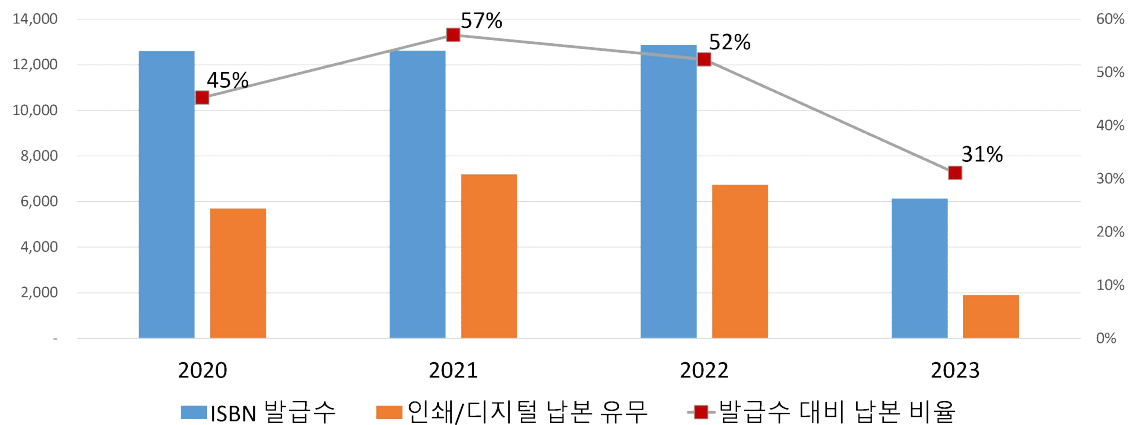
<표 3-5>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발간등록번호 발급 수	9,382	10,365	9,720	4,812
인쇄/디지털 납본 여부	4,238	5,740	4,992	1,843
발급수 대비 납본 비율	45%	55%	51%	38%

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급된 국제표준도서번호 대비 같은 기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공공간행물의 비율을 조사
-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공공간행물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납본 비율은 2020~2022년 기준 45%에서 57% 사이를 유지
- 2020년부터 2021년의 공공간행물의 경우 납본이 마무리된 것으로 추측건대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은 57% 이하로 저조

<그림 3-6>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발급 대비 납본 비율



<표 3-6>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납본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수	12,602	12,628	12,873	6,142
인쇄/디지털 납본 여부	5,701	7,200	6,748	1,909
발급수 대비 납본 비율	45%	57%	52%	31%

제2절 국내 학위논문 납본현황

1. 조사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

-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납본된 인쇄본/디지털본 학위논문 목록
- 데이터 표준화 실시: 252개의 대학이 1,054개의 대학명으로 존재하여 이를 하나의 대학명으로 데이터 표준화 실시
-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논문 제거: 9만4백 건의 동시 납본된 논문 존재 (이 중 5천6백 건의 논문은 유사도 95% 이상을 기준으로 제외)

○ 국회도서관

- 2020~2022년 납본된 인쇄본/디지털본 학위논문 목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dCollection

- 2020~2023년 대학별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현황 통계

○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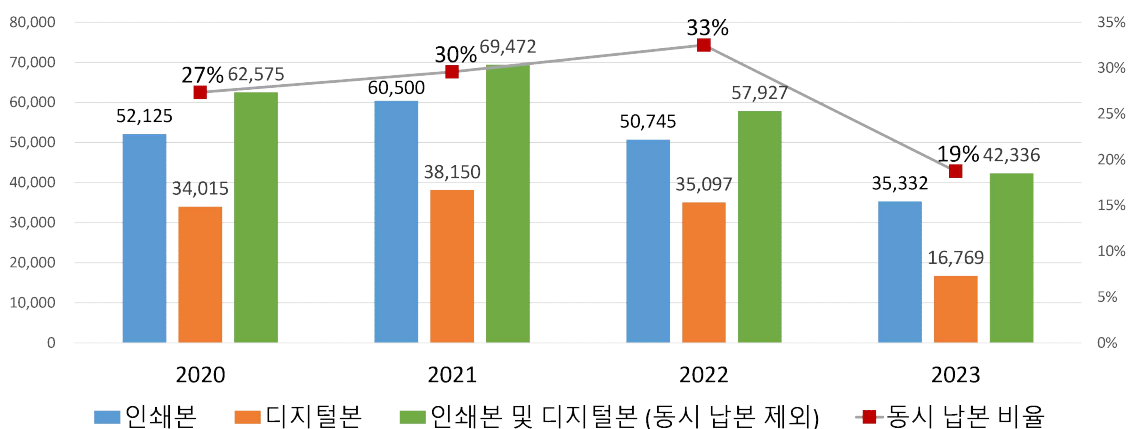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비교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현황 세부 분석

2. 학위논문 납본현황

가.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인쇄본 및 디지털본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등록 연도 기준)
-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2년에 5만8천 ~ 6만9천 건의 학위논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 이들 학위논문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 비율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27%, 30%, 3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그림 3-7>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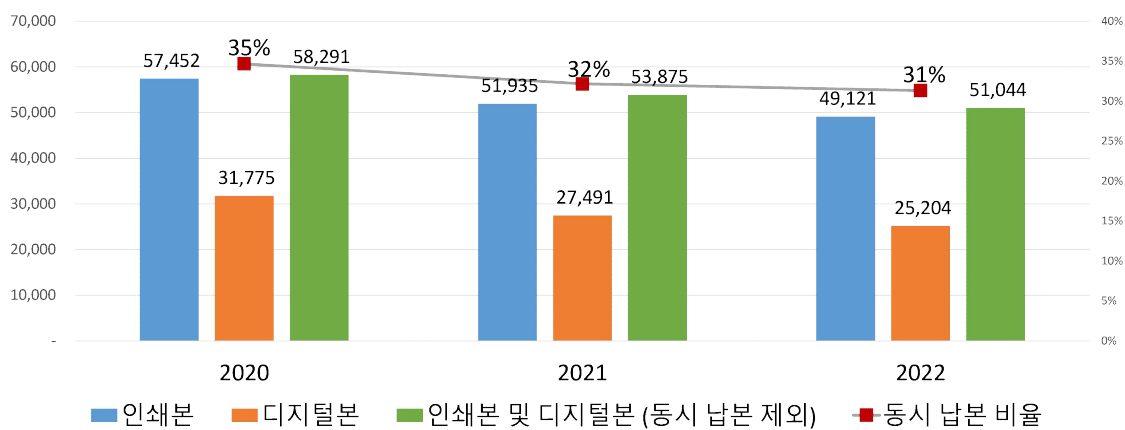
<표 3-7>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52,125	60,500	50,745	35,332
디지털본	34,015	38,150	35,097	16,769
인쇄본 및 디지털본 (동시 납본 제외)	62,575	69,472	57,927	42,336
동시 납본 비율	27%	30%	33%	19%

나.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인쇄본 및 디지털본의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2년에 5만1천 ~ 5만8천 건의 학위논문이 국회도서관에 납본
- 이들 학위논문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 비율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35%, 32%, 3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하지만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 비율인 31~35%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 비율인 27~33%와 유사

<그림 3-8>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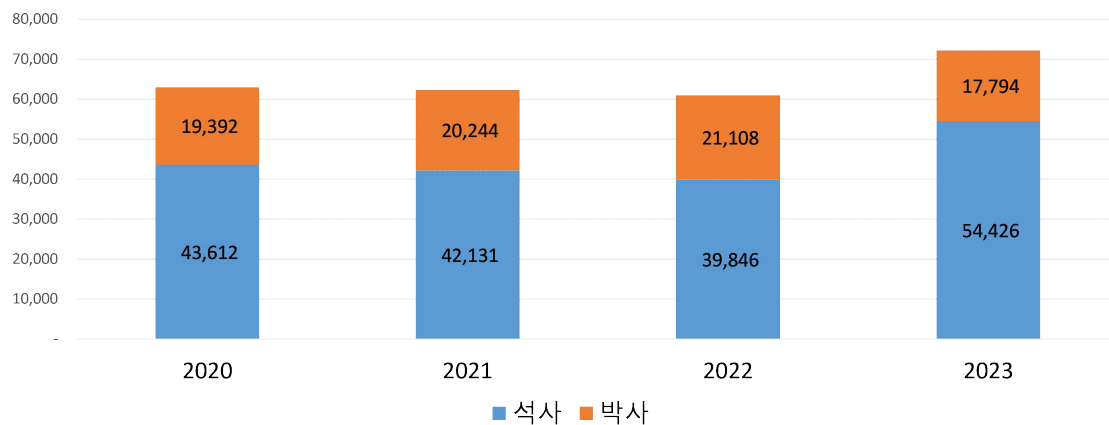
<표 3-8>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현황

구분	2020	2021	2022
인쇄본	57,452	51,935	49,121
디지털본	31,775	27,491	25,204
인쇄본 및 디지털본 (동시 납본 제외)	58,291	53,875	51,044
동시 납본 비율	35%	32%	31%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현황

-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KERIS에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년 6만1천에서 7만2천 건의 학위논문이 dCollection에 제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추세적으로 증가
- 석사학위 논문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4만 건 내외로 제출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같은 기간에 2만 건 내외로 제출

<그림 3-9>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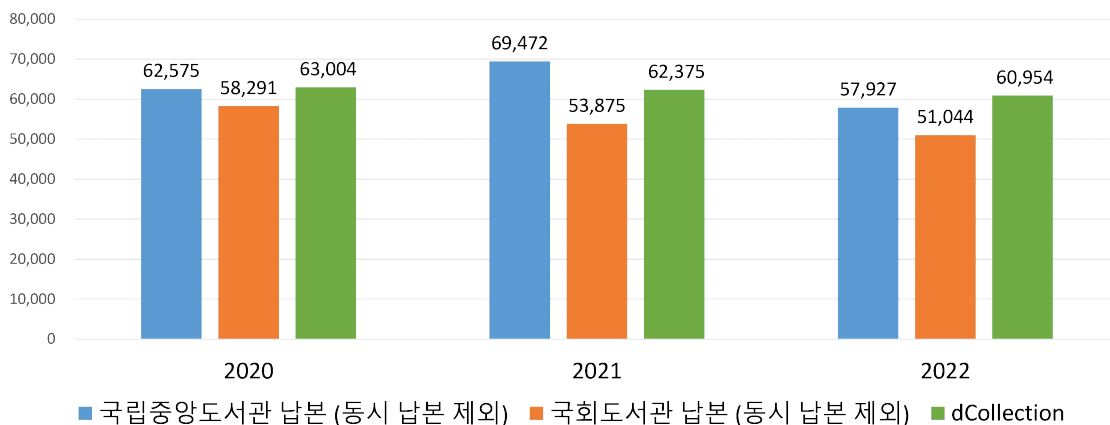
<표 3-9> 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석사	43,612	42,131	39,846	54,426
박사	19,392	20,244	21,108	17,794
합계	63,004	62,375	60,954	72,220

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 2020~2022년에 국립중앙도서관(등록 연도), 국회도서관(발행 연도), dCollection(등록 연도)에 납본 및 제출된 학위논문 수를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논문을 제외하고 분석
-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2년에는 dCollection이 각각 63,004건과 60,954건으로 당해 최다 학위 논문을 제출 받음
- 202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69,472건의 학위논문을 납본받아 dCollection (62,375건)과 국회도서관(53,875건)보다 많은 학위논문을 납본받음

<그림 3-10>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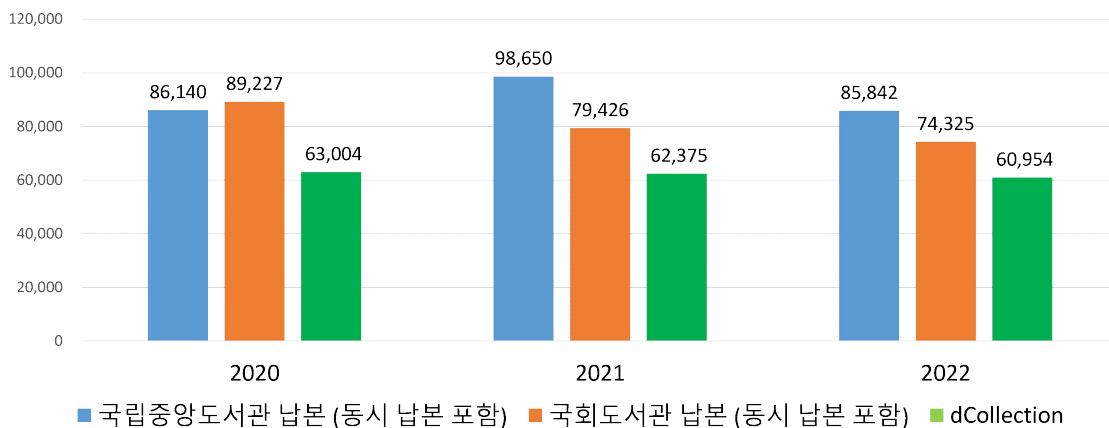
<표 3-10>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구분	2020	2021	202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제외)	62,575	69,472	57,927
국회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제외)	58,291	53,875	51,044
dCollection	63,004	62,375	60,954

마.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포함)

- 2020~2022년에 국립중앙도서관(등록 연도), 국회도서관(발행 연도), dCollection(등록 연도)에 납본 및 제출된 학위논문 수를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논문을 포함하여 분석
-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순으로 학위논문이 많이 제출
- 2020년의 경우 국회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다소 많은 학위논문을 납본받았으나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등록 연도를, 국회도서관은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학위논문의 납본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

<그림 3-11>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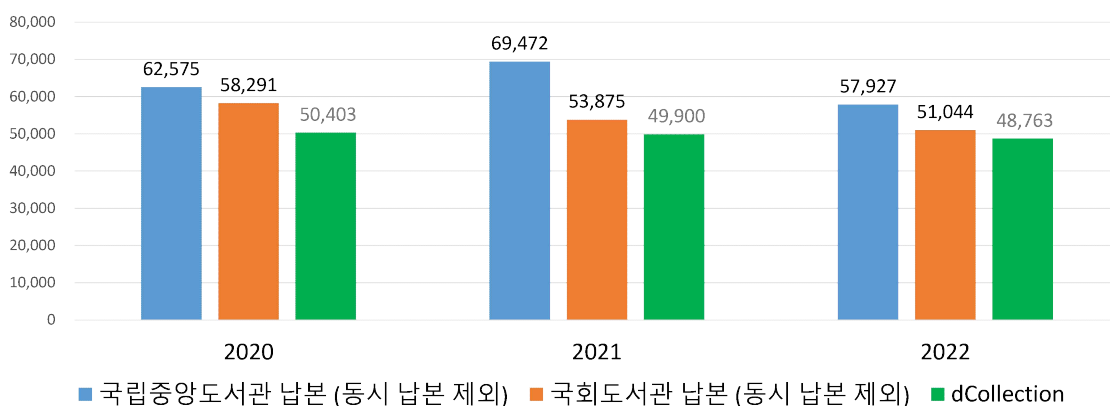
<표 3-11>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포함)

구분	2020	2021	202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포함)	86,140	98,650	85,842
국회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포함)	89,227	79,426	74,325
dCollection	63,004	62,375	60,954

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보정)

- 2020~2022년에 국립중앙도서관(등록 연도), 국회도서관(발행 연도), dCollection(등록 연도)에 납본 및 제출된 학위논문 수를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논문을 제외하고 분석
- 특히 KERIS에서 확인된 상위 10개 대학의 2020~2022년도의 실제 발행 논문 수는 dCollection 등록 논문 수의 70% 수준이며 이를 고려하여 dCollection에 제출된 논문 수를 80% 수준으로 보정하여 비교 분석
- 인쇄본 및 디지털본으로 동시 납본된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납본 및 제출된 학위논문 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의 순서로 분포

<그림 3-12>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보정)



<표 3-12>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Collection 학위논문 납본현황
(동시 납본 제외, 보정)

구분	2020	2021	202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제외)	62,575	69,472	57,927
국회도서관 납본 (동시 납본 제외)	58,291	53,875	51,044
dCollection (*80%수준 보정)	50,403*	49,900*	48,763*

3.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현황 조사개괄

가. 조사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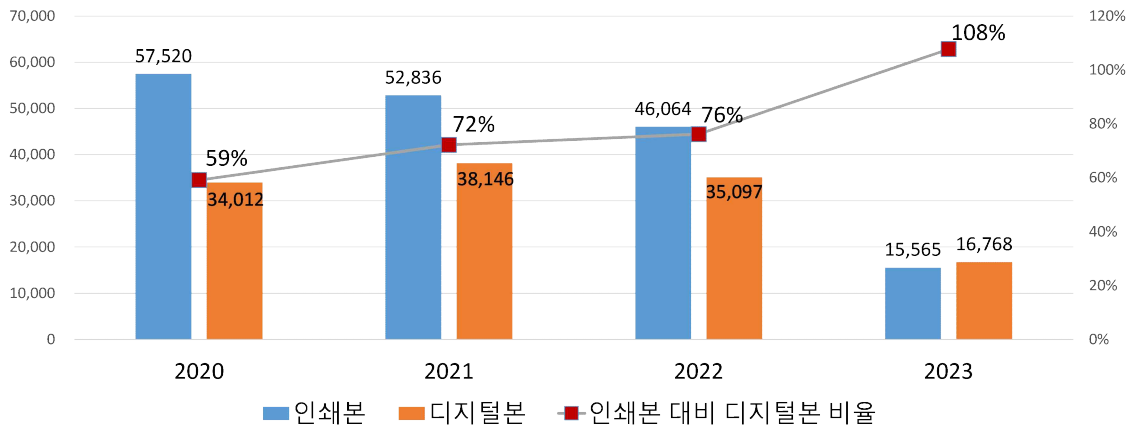
- 분석대상
 -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인쇄 및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목록을 분석
- 연도별 분석기준
 -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은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형식은 발행 연도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산한 결과 등록 연도가 실제 발행 연도와 대체로 일치하여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 따라서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은 발행 연도 기준으로 2019년 이전에 발행된 26,700건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
- 데이터 표준화
 - 252개의 대학이 1,054개의 대학명으로 존재하여 대학별 분석을 위하여 다른 대학명을 하나로 표준화하여 분석을 실시
- 인쇄본 및 디지털본 동시 납본 데이터
 -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동시 납본은 제거하지 않고 분석

나.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을 조사
-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쇄본 학위논문은 감소 추세이며 디지털본 학위논문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의 비율이 59%, 72%, 76%로 순차적으로 증가

<그림 3-13>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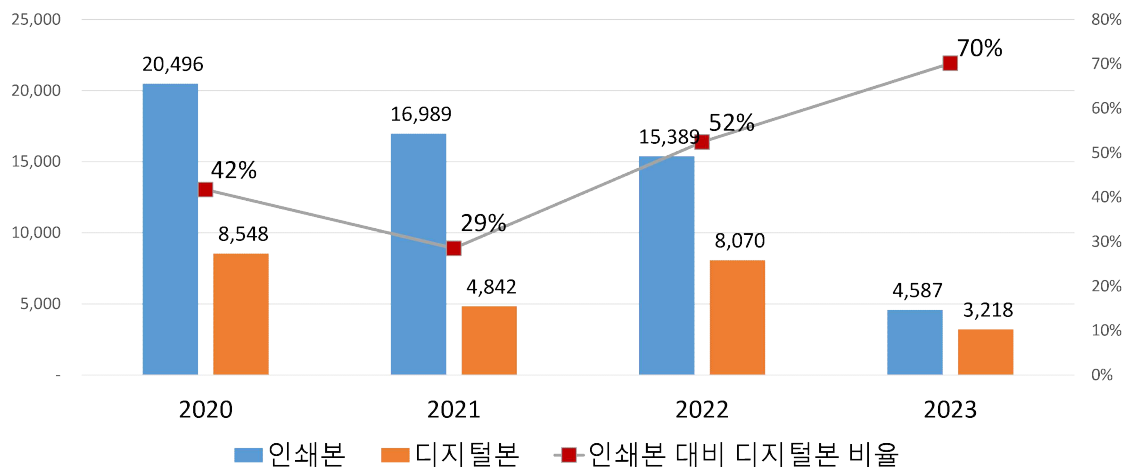
<표 3-13> 납본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57,520	52,836	46,064	15,565
디지털본	34,012	38,146	35,097	16,768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59%	72%	76%	108%

다.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비율을 조사
-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부산대, KAIST, 이화여대 순임
-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비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

<그림 3-14>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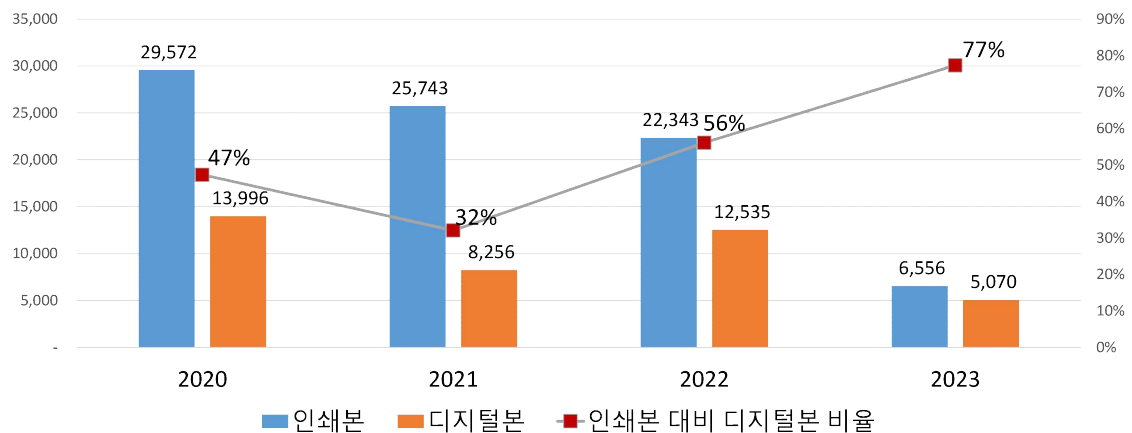
<표 3-14> 학위논문 생산 상위 1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20,496	16,989	15,389	4,587
디지털본	8,548	4,842	8,070	3,218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42%	29%	52%	70%

라.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비율을 조사
-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은 위의 10개 대학과 함께 동국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건국대, 충북대, 단국대, 홍익대, 인하대를 포함
-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비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

<그림 3-15>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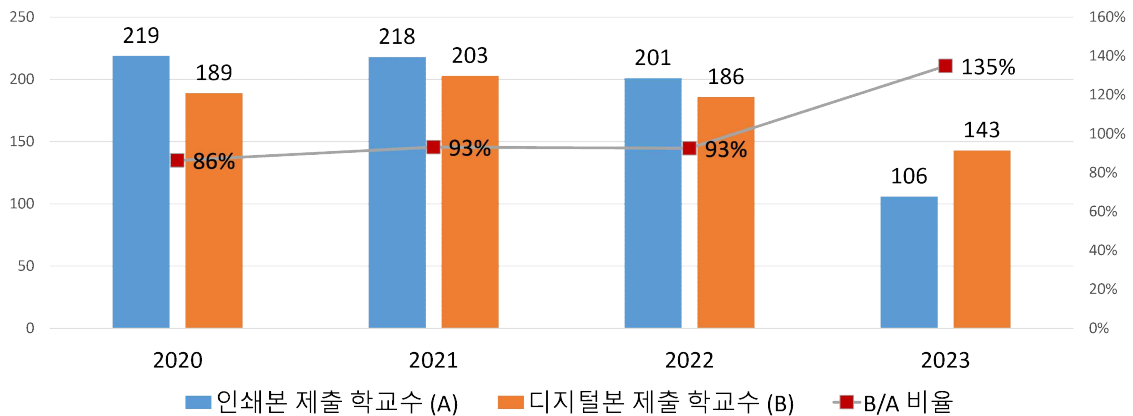
<표 3-15> 학위논문 생산 상위 20개 대학의 디지털본 제공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29,572	25,743	22,343	6,556
디지털본	13,996	8,256	12,535	5,070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	47%	32%	56%	77%

마.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제출 학교 수 변화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학교 수 변화를 조사
- 인쇄본 제출 학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이며 디지털본 제출 학교 수는 2021년 이후 증가 추세
- 2020년에 비하여 2021년과 2022년에 인쇄본 제출 학교 수 대비 디지털본 제출 학교 수가 86%에서 93%로 증가

<그림 3-16>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제출 학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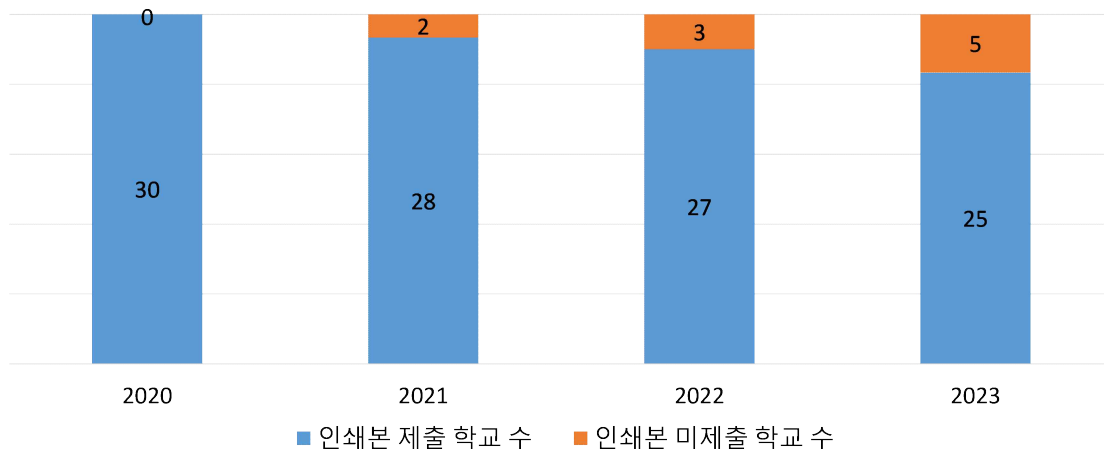
<표 3-16> 인쇄본과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제출 학교 수 변화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제출 학교 수 (A)	219	218	201	106
디지털본 제출 학교 수 (B)	189	203	186	143
B/A 비율	86%	93%	93%	135%

바.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쇄본을 미제출한 학교를 조사
- 2023년 10월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1년] A대, B대, [2022년] C대, [2023년] D대, E대가 미제출 학교로 확인
- 각 대학에 확인 결과 A대, C대, D대, E대가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을 생산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생산하기로 결정
- B대의 경우 학위논문을 인쇄 및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하나 인쇄본은 대학도서관에만 보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납본하지 않음

<그림 3-17>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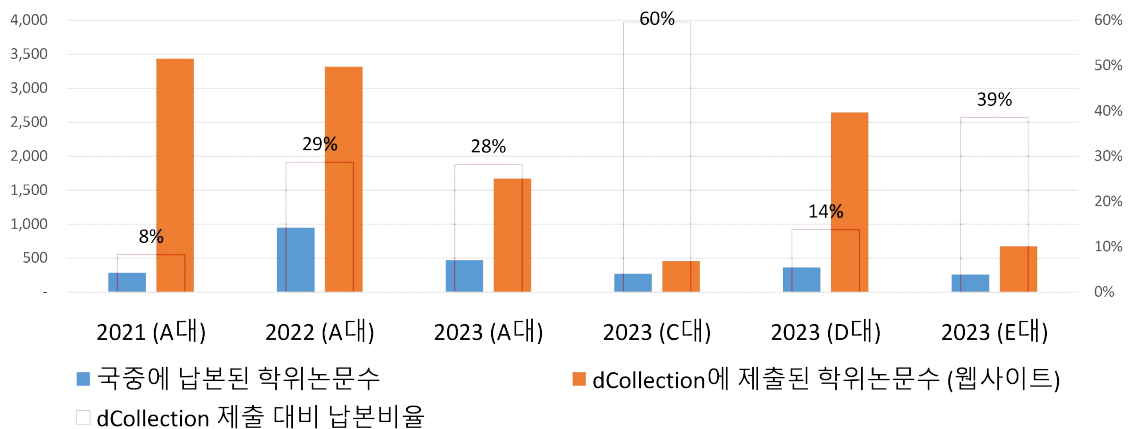
<표 3-17>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인쇄본 제출 학교 수	30	28	27	25
인쇄본 미제출 학교 수	0	2	3	5
인쇄본 미제출 비율	0%	7%	10%	17%

사.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납본현황

-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A대, C대, D대 및 E대의 납본현황을 조사
- A대(2021년 2월), C대(2022년 2월), D대(2023년 2월), E대(2023년 2월)는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납본
-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하여 납본하는 이들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납본되는 비율이 저조 (예: A대에서 2022년에 dCollection 제출 대비 납본비율이 29%로 저조¹⁰⁹⁾)

<그림 3-18>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납본현황



<표 3-18>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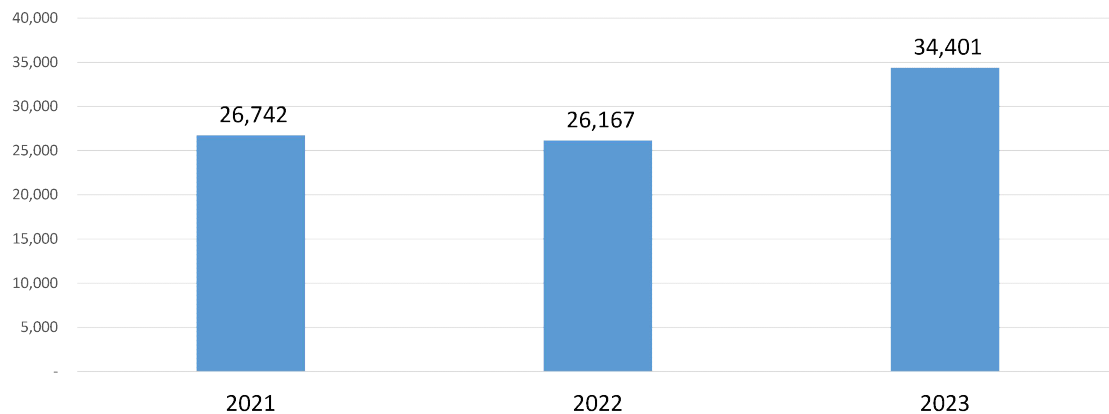
	국중에 납본된 학위논문수	dCollection에 제출된 학위논문수 (웹사이트)	dCollection 제출 대비 납본비율
2021 (A대)	284	3,436	8%
2022 (A대)	951	3,319	29%
2023 (A대)	471	1,672	28%
2023 (C대)	273	458	60%
2023 (D대)	365	2,643	14%
2023 (E대)	261	677	39%

109) A대학교에 확인 결과 '납본에 동의하였으나 비공개를 선택한 논문'은 비공개 기간이 경과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에 위 데이터 분석에서 dCollection 제출 대비 납본비율은 실제 납본에 동의한 비율보다 다소 감소

아. dCollection을 통하여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출 연도 기준으로 조사
-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¹¹⁰⁾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이 순차적 증가
- 특히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이 2023년에 증가 경향

<그림 3-19> dCollection을 통하여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표 3-19> dCollection을 통하여 납본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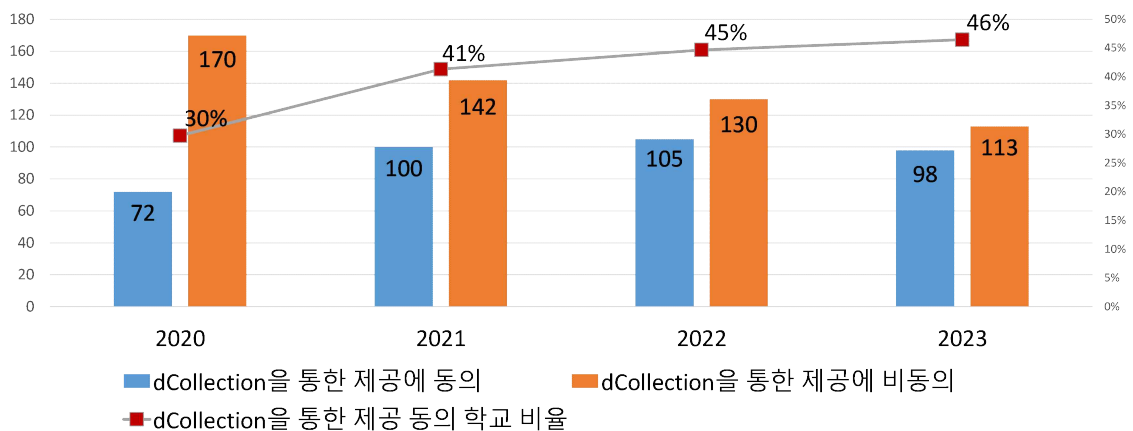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dCollection을 통해 납본된 논문 건수	26,742	26,167	34,401

110)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된 논문의 경우 원문 서비스는 되지 않고 보존 목적으로 납본됨

자.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본 제공 동의 학교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것에 동의한 학교를 조사
-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의한 학교의 비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
- 특히 2020년에는 242개의 학교 중 오직 72개의 학교만 dCollection을 통한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2023년에는 211개의 학교 중 98개의 학교가 동의

<그림 3-20>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본 제공 동의 학교



<표 3-20> dCollection을 통한 디지털본 제공 동의 학교

구분	2020	2021	2022	2023
dCollection 통한 제공에 동의	72	100	105	98
dCollection 통한 제공에 비동의	170	142	130	113
dCollection 통한 제공동의 비율	30%	41%	45%	46%

제3절 시사점

1.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현황 시사점

- 국내 공공간행물 납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려되고 있으므로, 납본에 관한 실제 현장 사례와 현황을 체계적 조사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납본은 다소 감소하고, 디지털본 납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쇄본과 동시 납본 비율 역시 증가 추세로 디지털본 납본을 정책적 고려 필요
- 발간등록번호 발급 대비 공공간행물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납본 비율은 2020~2022년에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며 발간등록번호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간행물 납본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비 공공간행물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납본 비율은 2020~2022년 기준 45%에서 57% 사이를 유지하며 ISBN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간행물 납본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국내 학위논문 납본현황 시사점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전체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들을 제도적 및 시스템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학위논문 생산 상위 대학들이 2021년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디지털본의 납본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교는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교는 2021년 이후 증가 추세

-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가 2021년에 2개교, 2022년에 3개교, 2023년 10월말 현재 5개교로 꾸준히 증가하여 학위논문의 디지털본 납본을 관련 법조항 반영 필요
- 특히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대학교의 실질적 납본비율은 상당히 저조하며 이들 학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된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한 제도적 및 시스템적 보완 시급
- 현재 dCollection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본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의한 학교의 비율 및 납본되고 있는 학위논문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한 디지털본 학위논문의 납본 고려 필요

제4장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1절 |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제2절 | 시사점과 개선 제언

제4장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1절 공공기관 납본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1. 개괄

가. 의견수렴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간행물 납본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실무기관의 납본업무 운영상황 파악
- 실무 담당자로부터 공공간행물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및 납본 절차를 파악하고 실제 납본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파악
- 현재 공공간행물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의 한계 및 절차상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납본제도 개선에 반영

나. 의견수렴 대상 및 기간

- 인터뷰 대상: 공공간행물 (정부간행물) 납본업무 실무담당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대부분의 실무 담당자는 기록물관리 담당자임)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업무 담당자 2명
 - 광역도서관 (4개 관) 납본업무 담당자 4명
 - 정부 기관 (2개 처) 납본업무 담당자 2명
 - 지방자치단체 (3개 처) 납본업무 담당자 3명
 - 공기업 (4개 관) 납본업무 담당자 4명

- 연구소 (2개 소) 납본업무 담당자 2명

○ 인터뷰 기간

- 2023년 10월 30일 ~ 11월 17일, 19일간

다. 인터뷰 방법 및 질문지

○ 인터뷰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직접 전화하여 납본업무 담당자 유선 인터뷰 진행
- 대부분의 정부 기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및 연구소)의 경우 공공기록물 담당자와 통화
- 납본업무 담당자에게 납본대상, 절차,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 직접 질문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세부 질문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질문지

- 질문 1. 현재 소속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공간행물은 무엇이며, 이들 공공간행물을 실질적으로 납본하고 계십니까? 만약, 납본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각각의 공공간행물을 납본하고 있습니까?
- 질문 2. 위의 공공간행물을 납본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납본업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당 공공간행물을 보존하고 계시는가요?
- 질문 3. 소속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공간행물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4. 귀사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공간행물(특히 디지털 형태의 자료)의 납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5.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의 납본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6. 소속 기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을 납본하는 것은 지적기록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7. 소속 기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을 납본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질문 8. 소속 기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의 납본을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제도, 방식, 시스템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인터뷰 데이터 분석 방법

- 인터뷰를 예약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한 정부 기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및 연구소)의 납본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가능한 시간 범위에서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종합
- 납본업무 담당자의 답변을 납본대상, 절차,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의 차원은 제도, 운영, 시스템 차원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종합
- 특히 기록물관리 담당자도 납본업무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뷰를 조기 종료하고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였기에 제한된 내용으로 분석 진행

2. 공공간행물 납본업무 담당자 인터뷰 분석 결과

가. 국립중앙도서관

- 납본 관리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발행된 공공간행물을 파악하고, 납본 및 미납본된 자료를 구분하여 미납본된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국가기록원 및 유관 기관과 간행물 목록 공유 등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제도 및 시스템으로 이들 기관과 협력에 제한적임
- ISBN을 포함한 목록은 부서명이 없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행한 부서 확인과 공문 협조 요청에 어려움 있음
-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미공개 자료도 보존을 위해서 비공개 형식으로 얼마든지 납본할 수 있으나 실무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납본을 꺼림
- 광역도서관은 지역에 있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납본업무를 돕는 기능을 해야 하며 매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나 참여가 부족함

나. 광역도서관 (4개관)

- 광역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납본업무를 돕는 기능을 해야 하나 대부분 광역도서관은 납본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담당자 없음
- 광역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납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으로 납본함
- 일부 광역도서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정된 부수로 이들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존하고 열람실에 비치하고 있음
- 일부 광역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출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다. 정부부처 (2개처)

- 주요 정부 부처의 경우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 각 부처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납본대상 자료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고 또한 국가기록원에도 제출
- 다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 내부자료 및 비공개자료의 경우 발간등록번호만 발급받고, 이들 자료를 국가기록원에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3개 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존재하여 납본업무를 안내
- 이들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은 납본업무는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개별부서에 납본하도록 안내하고 위임
- 일부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경우 생산된 정부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것을 납본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따로 납본하는 것을 미인지

마. 공기업 (4개관)

- 공기업에도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담당자들 대부분이 내부 기록문서 관리에 집중하며 납본업무 수행할 여력 부족
- 특히 기록물관리 담당자들 대부분이 공공간행물에 대한 납본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
 - 사례(1) 격월로 발행하는 60~70페이지 분량의 사보를 납본하지 않음
 - 사례(2) 연말 결산서는 국가기록원에만 제출하며 납본하지 않음

- 사례(3) 온라인으로만 공개되는 다양한 문서가 존재하니 납본하지 않음

바. 연구소 (2개소)

- 국가연구소의 경우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담당자는 각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납본대상 자료를 파악하고 납본 수행
- 다만 출판물의 경우 ISBN 발급받아 및 이들 자료를 납본 하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특별히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며 납본하지 않음
- 특히 관련 규정의 미비로 온라인으로만 공개되는 자료는 납본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광역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및 광역도서관의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사항
국립중앙 도서관	•발행된 공공간행물을 확인하고 미납본된 자료의 수집 어려움	•공공간행물 납본을 위해서 국가 기록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공공간행물 온라인 Commons활용 -호주: National eDeposit Service -캐나다: Weekly Acquisition List -뉴질랜드: 기관별 Newsletters -노르웨이: Kudos 간행물 포털
	•국가기록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나 어려움	
	•ISBN 및 발간등록 번호를 포함한 목록은 부서명이 없음	
광역 도서관 (4개관)	•지역의 납본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지 모르며 담당자 없음	•광역도서관의 납본업무 명확화 및 체계적인 협조 시스템 구현 -일본: 국회도서관 분소 운영
	•지자체의 간행물은 주기적으로 받으나 내부 보존 및 비치만 함	

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사항
정부부처 (2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료는 발간등록번호만 받아 국가기록원에만 제출 • 비공개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제출은 하나 납본은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처의 발행자료 확인 및 납본 • 비공개자료도 납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강화
지방 자치단체 (3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업무는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부서에 안내하고 위임 • 현재 인력 부족으로 납본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 어려움 • 국가기록원 제출을 납본으로 착각, 국중과 국회 납본 미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납본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홍보 및 교육 제공 • 공공간행물 온라인 Commons 활용 •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인쇄본도 함께 수집

다. 공기업 및 연구소

○ 공기업 및 연구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사항
공기업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자료 납본에 대한 인식이 부족 (예1) 격월 발행하는 사보 미납본 (예2) 연말결산서는 기록원만 제출 (예3) 공개되는 온라인 문서 미납본 • 내부 기록문서 관리에 집중하며 납본업무를 수행할 여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의 납본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홍보 및 교육 제공 •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인쇄본도 함께 수집 (현재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발행됨)
연구소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물의 경우 ISBN 발급 및 납본 하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미납본 • 관련 규정의 미비로 중요한 온라인자료를 납본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제도의 개선으로 연구소에서 온라인 형식으로만 생산된 자료가 납본될 수 있도록 함

제2절 대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1. 개괄

가. 의견수렴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실무기관의 납본업무 운영상황 파악
- 실무 담당자로부터 학위논문 납본제도에 관한 인식 및 납본절차를 파악하고 실제 납본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파악
- 현재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의 한계 및 절차상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납본제도 개선에 반영

나. 의견수렴 대상 및 기간

- 인터뷰 대상: 학위논문 납본업무 실무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업무 담당자 2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담당자 1명
 - 주요 대학교 (34개 대학교) 납본업무 담당자 34명
- 인터뷰 기간
 - 2023년 10월 30일 ~ 11월 17일, 19일간

다. 인터뷰 방법 및 질문지

- 인터뷰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수행하는 대학교 도서관에 직접 전화하여 납본업무 담당자와 통화하여 인터뷰 진행

- 납본업무 담당자에게 납본대상, 절차,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세부 질문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질문지

- 질문 1. 현재 소속 대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학위논문은 어떠한 형태(인쇄 혹은 디지털)이며, 이들 학위논문을 실질적으로 납본하고 계십니까?
- 질문 2. 위의 학위논문을 납본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납본업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당 학위논문을 보존하고 계시는가요?
- 질문 3. 소속 대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학위논문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4. 귀사와 비슷한 다른 대학들이 학위논문(특히 디지털 형태의 학위 논문)의 납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5.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6. 소속 대학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학위논문을 납본하는 것은 지적 기록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7. 소속 대학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학위논문을 납본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질문 8. 소속 대학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제도, 방식, 시스템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인터뷰 데이터 분석 방법

- 인터뷰를 예약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교의 납본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가능한 시간 범위에서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종합
- 납본업무 담당자의 답변을 납본대상, 절차,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의 차원은 제도, 운영, 시스템 차원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종합
- 특히 학위논문 담당자도 납본업무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뷰를 조기 종료하고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였기에 여러 차례 인터뷰가 시행되고 제한된 내용으로 분석 수행

2. 대학도서관 납본업무 담당자 인터뷰 분석 결과

가. 학위논문 납본현황 개괄

- A대(2021년 2월), C대(2022년 2월), D대(2023년 2월), E대(2023년 2월)는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출받아 납본
- 대부분 대학들은 인쇄본 및 디지털본의 학위논문을 모두 생산하여 두 형식 모두 납본을 하거나 오직 인쇄본만 납본
 - 인쇄본 & dCollection 통한 디지털본 납본
 - dCollection 사용하나 인쇄본만 납본
 - dCollection 사용하여 디지털본 납본, 인쇄본은 학교에 보관
 - dCollection 사용 안함 (자체 디지털 저장소 활용), 인쇄본만 납본

나. 제도 차원

-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전에 학위논문의 납본을 중단했다가 재개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학위논문 납본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짐
- 일부 대학도서관의 담당자는 학위논문의 납본은 대학이 아닌 학위논문을 작성한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 일부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담당자는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협의체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음
- 도서관법에는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위논문을 납본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운영 차원

-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학위논문을 dCollection에 제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것은 중복업무이며 연동 및 단일화가 절실
- 대학도서관에서는 인력감축의 문제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납본 업무에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상황
- 지방 소재 대학교는 매년 양장본의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 우편 및 택배로 큰 비용 지출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디지털본 학위논문은 학생의 변경요청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담
- 일부 대학도서관 담당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미 학위논문을 인쇄본으로 납본했음으로, 디지털본 납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대학 내 서고 공간 부족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인쇄본 학위논문의 생산을 중단하고 디지털본 학위논문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 중임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가. 제도 차원

○ 대학교 도서관의 제도 차원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사항
제도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의 중단 및 재개로 혼란 초래 (이미 대학차원에서 인센부수 조정) •학위논문의 납본은 대학이 아닌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이 아니라 이해 (관련 공문) •학위논문을 납본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및 대학도서관협의체를 통한 납본의 중요성 홍보 및 협력 강화 •도서관법 및 시행령에 납본대상 및 책임자의 명확한 규정 제시

나. 운영 차원

○ 대학교 도서관의 운영 차원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사항
운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논문의 dCollection 제출 및 국중과 국회 납본은 중복 업무 •도서관 인력감축으로 전담인력을 두기 어렵고 특정 시기에 업무 과중 •지방의 대학교는 우편 및 택배로 큰 비용을 지출 •국중에 납본시 학생의 변경요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납본업무의 일원화 및 연동으로 대학도서관의 납본업무 경감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 생산 및 제출로 관련 업무 및 비용 경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납본된 자료를 변경하지 않도록 교육

제5장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제1절 |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2절 | 법제도 자문

제3절 |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제5장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제1절 전문가 자문위원회

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활용

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목적

-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계 및 출판계 의견 청취
-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개선(안) 준비를 위하여 문헌정보학계 및 출판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국내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도서관법 및 시행령 개선안의 근거로 활용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일정

- 그간 연구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납본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승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 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 일정

- 각 전문가와 2023년 11월 6, 7, 14, 15일 총 4차례 회의 진행
- 납본과 관련한 법제도, 납본 절차 및 서비스, 납본형식, 기타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2. 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가. 윤희윤 교수

○ 세부 자문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1> 주요 자문내용 (윤희윤 교수)

구분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은 국가 아카이브 차원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자료의 제공이라는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임 - 현재 도서관법의 납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가도서관법과 납본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납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인도서관이 1차 소속 기관이 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법상 납본과 관련한 용어, 납본의 범위, 납본의 법적 근거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이 필요함
납본절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납본자의 입장에서 납본은 규제이며 실질적으로 납본 및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여럿 존재하기에 (지방공공기관 자료를 광역 대표도서관에 제출,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납본) 이를 제도적 및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간행물의 경우 디지털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의 중심기관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파일은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적 납본 기관으로 학위논문의 망라적 수집의 책무가 있으며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본받아 이들 논문이 아카이브될 수 있도록 해야함
인쇄/디지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자료의 형식과 관계없이 인쇄본 및 디지털본을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학위논문의 경우 앞으로 인쇄본의 발행이 약화될 것이며 디지털본을 제대로 납본 받아서 보존(아카이브)하고 서비스를 해야함 - 장서관발의 측면에서 인쇄본과 디지털본을 동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파일의 납본도 인쇄본의 납본과 동등한 건수로 관리되어야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경우 내국인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는다면 이것도 납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내국인이 외국대학에서 작성한 학위논문을 납본받아 관리해야할 것임 -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논문을 제외하고 박사학위논문만을 납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

나. 조용완 교수

○ 세부 자문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2> 주요 자문내용 (조용완 교수)

구분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서관법상 납본제도의 맹점은 납본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개선되는 납본제도는 납본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학위 논문을 납본받아 보존하고 서비스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하여 학위논문 납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권위와 힘이 실릴 것임
납본절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dCollection 제출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동시 납본은 각 대학도서관에 업무 부담과 발송비용이 발생하기에 KERIS의 dCollection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식의 논문을 납본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학위논문을 납본하는 것과 공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원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약 원문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받아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자료의 존재는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들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내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학술정보의 공공성 차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허락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서 해당 기관의 dCollection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인쇄/디지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많은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서 직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학도서관의 업무 편의라는 관점에서 학위논문의 납본은 인쇄본보다는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공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표의 방법이 불명확한 상황임

다. 이승민 교수

○ 세부 자문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3> 주요 자문내용 (이승민 교수)

구분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납본을 더욱 실효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법 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안에서 납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포함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납본법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납본을 모두 포함해야 함 - 특히 해외사례의 일방적인 도입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납본절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하는 기관으로서 현재의 납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이는 납본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납본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학위논문의 경우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은 dCollection으로 납본을 일원화시킨 후 제도적 협의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원문제공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인쇄본 학위논문은 계속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받아 필요하다면 dCollection에도 디지털화하여 원문을 제공하는 식으로 협력하면 좋을 것임
인쇄/디지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디지털본 발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납본 대상으로 디지털본으로 전면 전환보다는 인쇄본 및 디지털본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적절함 - 특히 인쇄자료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고려해서 인쇄본도 계속해서 납본을 받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두 형식이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모두 납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

라. 백원근 소장

○ 세부 자문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4> 주요 자문내용 (백원근 소장)

구분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출판물의 경우 이미 인쇄본 및 디지털본의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 방식의 변화는 출판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님 - 디지털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납본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적절한 대응임 - 납본정책은 시대환경의 변화와 각 기관에서 가진 정책적 방향 및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납본의 기본원칙인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을 망라하여 수집·보존하여, 당대 및 후대에 서비스해야 할 것임
납본 절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하여 일선 기관의 납본 및 제출을 일원화하여 행정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화된 납본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납본은 국가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대와 후대에 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납본된 자료를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고민을 해야 함 - 공공간행물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인쇄/디지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형식과 관련하여 인쇄본과 디지털본 모두 공개된 것이라면 각 형식이 고유한 특성이 있기에 두 형식 모두 납본하고 그 형식 그대로 서비스해야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행물들 중 일부는 실비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출판되는 정부간행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 정부간행물 중 연구용역자료는 발주기관의 입장과 맞지 않거나 공개 시 우려되는 파장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납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전문가 자문 종합

가. 납본제도

○ 납본제도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디지털 형식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적절한 대응임	•모두
별도 납본법	•납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포함하는 출판물의 납본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윤희윤 •이승민
납본대상 규정	•도서관법상 납본제도의 맹점은 납본대상으로 학위논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되는 납본제도는 납본대상으로 학위논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용완
출판계 입장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과 관련한 납본제도의 변화는 출판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님	•백원근
인쇄본 및 디지털본 형식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쇄본 및 디지털본을 모두 수집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함	•윤희윤 •이승민 •백원근
	•대학도서관의 업무편의라는 관점에서 학위논문의 납본은 인쇄본보다는 디지털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임	•조용완
장서개발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디지털 파일의 납본도 인쇄본의 납본과 동등한 건수로 관리되어야 함	•윤희윤
학위논문 종류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박사학위 논문만을 납본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윤희윤

나. 납본 절차

○ 납본 절차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중복 제출 및 납본	•현재의 납본은 피납본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며 이를 제도적 및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윤희윤 •이승민 •백원근
납본 중심기관	•납본의 중심기관을 국중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납본된 자료를 다른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윤희윤
학위논문 납본기관	•학위논문은 dCollection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적 협의를 통해서 이를 납본 받는 방향으로 가야함	•이승민 •조용완
학위논문 공개 동의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본받아 이들 논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윤희윤), 최소한 국중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조용완)	•윤희윤 •조용완

다. 관련 서비스

○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납본자료의 이용서비스	•납본은 보존 및 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납본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야 함	•윤희윤 •백원근
공공간행물 이용서비스	•공공간행물의 경우 디지털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함	•윤희윤
인쇄본의 디지털화	•인쇄본의 학위논문은 국중이 계속해서 납본을 받아 필요하다면 디지털화하여 dCollection에도 원문을 제공	•이승민
학위논문 링크제공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중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링크를 제공해서 해당기관의 dCollection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윤희윤 •조용완

제2절 법제도 자문

1. 법률전문가 자문 개괄

가. 법률 자문 배경

- 납본 관련 본법 및 시행령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자문 실시
-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되는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수용하기 위한 OECD 국가들의 납본정책 변화를 반영
- 국내에서도 디지털 형식의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문헌정보학계 및 출판계의 전문가의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자문 의견을 반영

나. 법률 자문 목적

-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서관자료의 법적 정의 및 납본 의무 이행요건을 구체화
- 도서관법 및 시행령을 포함하는 납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
- 특히 온라인 형식으로만 발행되고 있는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추세를 반영하여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다. 자문 변호사 및 일정

- 자문 변호사: 우원상 변호사
 - 법무사무소 지울 대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고문 변호사

○ 자문일정

- 2023년 11월 6, 7, 14, 15일 총 4차례 회의 진행
- 2023년 11월 21일 총 3개의 개정안 도출

라. 법제도 개정 목적 (질의 요지)

-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¹¹¹⁾의 각 기관(이하,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표현에 따라 ‘국가 등’이라고 함)이 발행 또는 제작하는 도서관자료(소위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단순히 공공간행물이라고 함) 중 디지털 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 도서관법의 한계상 수집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서관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안 마련 자문을 진행

마. 개정안 발의 특징 (회신의견 요지)

- 소위 공공간행물의 경우, 그 법적 정의가 부존재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여야 하나, 특별히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현재 상황과 같이 현 도서관 법령에 따라 해석한 뒤 내부적으로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후술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저촉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별도 공공간행물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전제하에 현재 도서관 법

111)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령의 개정 방안을 총 3가지 안으로 마련함

2. 도서관법 및 시행령 개선¹¹²⁾

가. 개선 1안: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1) 개선 1안의 특징

- 현 도서관법 제21조 제2항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
- 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여 온라인 자료 제외 부분을 삭제
- 온라인 자료 제외 부분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① ISBN이 부여된 온라인 자료, ② 국가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디지털 파일 자료의 납본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
- ②에 근거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만 작성된 공공간행물의 납본 의무가 발생

2) 개선 1안의 장점

- 현재 다소 번잡하게 되어 있는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의 법문을 정리할 수 있는 점
- 시행령을 위주로 한 개정안이어서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점

3) 개선 1안의 단점

- 국가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디지털 파일 자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수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 본질적으로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 개정이어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12) 우원상 변호사는 자문의견이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양해를 구한다고 밝힘

규정(동법 제55조 제1항¹¹³⁾)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국가의 국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나. 개선 2안:

도서관법 제21조 제2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1) 개선 2안의 특징

- 현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만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
- 기존에 도서관 자료 납본 시 부수적 의무에 추가하여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를 국가 등에 부과
- 이로 인하여 법률로 직접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
- 이에 부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개정하여 납본 부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

2) 개선 2안의 장점

- 납본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 시행령 개정의 폭이 거의 없는 점

3) 개선 2안의 단점

- 법률 개정의 폭이 1안 대비 커서 국회 등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단체 등이 반발하면 개정이 불가능 한 점

113) 제55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기한 과태료 규정은 오로지 제21조 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제2항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존재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다. 개선 3안:

직접 대상별 규정을 두는 개정안

1) 개선 3안의 특징

- 두 가지 방식을 병존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두고 제3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공공간행물의 납본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
- 제4항에는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4항¹¹⁴⁾과 같은 유형의 조문을 신설하여 오로지 학위논문만을 그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
- 이 과정에서 기존 제3항 및 제4항은 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변경
- 이에 부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을 신설(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변경)하여 납본 부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

2) 개선 3안의 장점

- 학위논문 및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공공간행물에 대한 납본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 학위논문으로 한정하면 같은 구조의 규정이 국회도서관법에 마련되어 있어서 그 개정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114)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3) 개선 3안의 단점

- 1안의 단점 중 행정적 문제가 공유되는 상태에서,
- 2안과 대체로 단점이 공유된다는 점,
- 도서관법 제21조 제3항을 신설할 때, 같은 조 제1항과 의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점

3.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가. 공공간행물의 정의가 부존재하는 문제

- 소위 공공간행물의 경우, 그 법적 정의가 부존재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도서관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 법률적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실무적 관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특별히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먼저, 작성의 주체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115), 제4항 등을 종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항 각호의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학교, 특수법인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적 관점에서의 공공간행물 작성 주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법령상 ‘국가 등’으로 보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함

115)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 또한, 납본 대상이 되는 자료의 경우 도서관법 제3조 제2호¹¹⁶⁾의 도서관 자료로 한정하는 것 역시 실무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결국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실무적 관점에서 일컫는 공공간행물을 도서관 법령에서 말하는 국가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도서관자료라고 본다고 한다면 새로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은 생략하기로 결정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저촉 문제

- 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
- 이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¹¹⁷⁾, 동 시행령 제3조¹¹⁸⁾에 비추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록물의 범위가 공공간행물과 상당 부분 공유되며, 작성주체의 관점 및 대상의 범주에서 공공기록물이 더 넓은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¹¹⁹⁾에서 정하

11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1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18)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119)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의 업무 범위와 납본에 관한 업무 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기관업무 분장 부분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이 법 제19조 제1항¹²⁰⁾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¹²¹⁾에 의한 보존기간, 시행령 제27조¹²²⁾에 따른 공개 여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납본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 보존이 기본적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과 상이하게 처리될 여지가 있는 점, 납본된 자료는 지식 공유의 차원에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데 비밀취급자료 등에 대한 처리와 병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도서관법령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 도서관법령 개정에 대한 3가지 안에 대한 각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음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120)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1)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22)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1안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수정증보판을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온라인자료 제외 부분을 시행령으로 내리고 수정증보판 부분을 괄호로 처리하여 규정의 시인성을 높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8호, 제9호 신설(기존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하여 납본 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그 수집대상을 학위논문으로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파일

현 행	개 정(안)	비고
<p>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p>1~7. (현행과 동일)</p> <p>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p> <p>9.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행 또는 제작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p> <p>10.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p>	<p>형태의 자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p>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p> <p>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p> <p>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p>	<p>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자료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p>1-3. (현행과 동일)</p>	
<p>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p> <p>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p> <p>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p>	<p>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디지털파일자료의 경우</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p>	국가등을 정의하는 규정이 제1항으로 옮겨간 부분을 반영
(신설)	<p>부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안)	비고
2안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과 동일)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가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1호는 기존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2호의 신설로 디지털 파일의 납본의무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함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⑤ 국가등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해야 하는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 1부 2. 디지털파일자료의 경우 :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부수	납본부수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부수는 기존 규정(제3항제1호)를 활용하도록 규정
(신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안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과 동일)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현행과 동일)	

제5장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현 행	개 정(안)	비고
한다.		
(신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제작한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도서관자료는 디지털파일 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납본의무 규정 신설 (제1항과 의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신설)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사람의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이 온라인 자료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4항을 참조하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납본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조문 번호 변경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번호 변경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 제21조제3항 신설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신설)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파일자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학위논문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자료 :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부수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경우 : 3부	납본부수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부수는 기존 규정(제3항 제1호)를 활용하도록 규정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 번호 변경
(신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절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1.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 주요 7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정부간행물의 납본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공공간행물도 납본 가능
-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16개의 OECD 국가들은 학위논문을 국립 도서관의 중요한 납본 대상으로 관리하며, 그외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문무과학성 고시)은 학위논문을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수집대상으로 관리
- 학위논문을 납본 대상으로 삼고 있는 16개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는 대학을 학위논문 납본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대학도서관을 포함하는 대학 내의 기관에서 직접 납본 수행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하는 14개 OECD 국가들은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하거나 디지털 형식이 우선하며, 이들 포함한 22개의 국가에서 학위논문은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 가능
- 또한 THE 세계대학순위 기준 상위 100대 대학을 보유한 상위 10개 국가 중 9개의 국가에서 학위논문은 디지털 형식으로만 혹은 디지털 형식이 우선하여 발행되고 있었으며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본을 중심으로 수집 및 보존
- 대부분의 국가는 미디어 형식이 인쇄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정부간행물 및 학위 논문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 정비
- 국내에서도 공공간행물과 관련한 납본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 형식으로만 생산된 정부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납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납본 기관에서 원활히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 방식 정비 필요

2. 국내사례 종합 및 시사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공공간행물의 인쇄본 납본은 다소 감소하고, 디지털본 납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쇄본과 동시 납본 비율 역시 증가 추세로 디지털본 납본을 정책적 고려 필요
- 발간등록번호 및 ISBN 발급 대비 공공간행물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의 납본 비율은 2020~2022년에 50% 내외이며 발간등록번호 및 ISBN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간행물 납본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국내에서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납본 비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공공간행물의 납본을 위해서 납본제도 및 관련 시스템 정비 시급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전체 학위논문의 인쇄본 대비 디지털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쇄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교는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교는 2021년 이후 계속 증가
- 학위논문 생산 상위 30개 대학의 인쇄본 미제출 학교가 2021년에 1개교, 2022년에 2개교, 2023년 10월 말 현재 4개교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 대학교의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의 실질적 납본 비율은 상당히 저조
- 해외의 많은 국가의 대학은 이미 학위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형식으로만 학위논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들도 이에 참여하리라 생각 하므로 학위논문의 디지털본 납본을 위한 관련 법 조항의 개선 필요
-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내 대학이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고 KERIS에 디지털본을 제출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통

합하여 대학도서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납본 방식 개선 시급

3. 자문 의견 종합 및 시사점

-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전원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매체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해서 관련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쇄본 및 디지털본을 모두 수집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학위논문을 납본하고, KERIS의 dCollection을 통한 제출은 피납본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며 이를 제도적 및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전문가는 학위논문의 납본은 인쇄본보다는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의견 제시
- 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식의 학위논문을 dCollection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적 협의 및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납본받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으로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

4.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 상기 공공간행물 납본제도와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도서관법 및 시행령은 미디어가 디지털 및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자료의 실질적 납본을 위한 개선 시급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는 3개의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3개의 안 중 법 개정 용이성의 이유로 1안을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제안
 - 이는 규정 정비를 위한 법 개정을 명분으로 한다면 쟁점화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쉽기 때문임
 -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안의 문제들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하여 개정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먼저 제안
- 하지만 연구진은 실무적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위논문을 포함한 공공간행물을 납본받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피납본 기관이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제시된 3개의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개선안 중 3안을 유력한 안으로 제안
- 끝으로 공공간행물의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련 납본 방식 및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납본업무와 관계된 유관 기관의 협력하여 피납본 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 필요
 -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것은 물론 KERIS의 dCollection에 제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피납본 기관이 관료적 제도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ERIS의 협력 필요

-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 광승진, 김정택, 박옥남, & 최재황. (201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61-179.
- * 김소량.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납본과 보존 관리 개선안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9. 광주
- * 서향기. 정부간행물의 납본 및 보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8. 서울
- * 윤희윤.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8.
-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 * 이승민. (2019).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73-93
- * 이충훈, 김승철, & 이문형. (2023). 학위논문 납본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대도협회지, 24, 71-113.
- * 장보성, &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 * 조용완. (2021). 주요국의 법정납본 법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369-393.
- * 최재황, 광승진, &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 * 한혜영. (2003).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51-79.

<해외 문헌>

- * Crews, K. D. (2013). Copyright and your dissertation or thesis: Ownership, fair use, an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cessed on November 1, 2023:
https://grad.tamu.edu/getmedia/9e36e009-416e-4002-8768-4f37a2bf2986/copyright_dissthesis_ownership.pdf
- * Gould, S. (2016). UK theses and the British Library EThOS service: from supply on demand to repository linking.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4(1), 7-13.
- * Jasion, J. T. (2019).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Routledge.
- * Library of Congress (2019).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Dissertations and theses. Accessed on November 1, 2023:
<https://www.loc.gov/acq/devpol/theses.pdf>
- * Ngoepe, M., & Makhura, M. (2008). Assessing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regard to the Legal Deposit Act: implications on access to South Africa's published heritage. *Mousaion*, 26(2), 98-114.
- * Roudik, P., Buchanan, K., Tariq Ahmad, T., Zhang, L., Isajanyan, N., Boring, N., ... & Feikert-Ahalt, C. (2018). Digital Legal Deposit in Selected Jurisdictions: Australia, Canada, China, Estonia, France, Germany, Israel,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outh Korea, Spain, United Kingdom.
- * Schöpfel, J., & Lipinski, T. A. (2012). Legal aspects of grey literature. *The Grey Journal*, 8(3), 137-153.
- * Sözlü, H., & Özbek, M. (2020). Legal Deposit of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and Overview (History, Principles and Elements). *Cultural Heritage and Science*, 1(1), 7-14.
- * Zarndt, F., Carner, D., & McCain, E. (2015). An international survey of born digital legal deposit policies and practices.

<OECD 국가의 납본정보 페이지>

- * 호주, <https://www.nla.gov.au/using-library/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
- * 오스트리아, <https://www.onb.ac.at/en/library/legal-deposit/>
- * 벨기에, <https://www.kbr.be/nl/wettelijk-depot/>
- * 캐나다,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Pages/about-legal-deposit.aspx>
- * 칠레, <https://www.bibliotecanacional.gob.cl/deposito-legal>
- * 콜롬비아, <https://bibliotecanacional.gov.co/es-co/servicios/profesionales-del-libro/deposito-legal>
- * 코스타리카, <http://www.sinabi.go.cr/servicios/DepositoLegalCostaRica.aspx>
- * 체코, <https://www.en.nkp.cz/services/services-for/legal-deposits/legal-dep-n>
- * 덴마크, <https://pro.kb.dk/en/legal-deposit>
- * 에스토니아, <https://www.rara.ee/en/for-partners/for-publishers/sailituseksemplar/>
- * 핀란드, <https://www.kansalliskirjasto.fi/en/legal-deposit-office>
- * 프랑스, <https://www.bnf.fr/fr/le-depot-legal>
- * 독일, <https://www.bsb-muenchen.de/en/competence-centers-and-state-wide-services/state-wide-tasks-and-services/legal-deposit-unit/>
- * 그리스, <https://www.nlg.gr/static-page/kata-nomo-katathesi/>
- * 헝가리, <https://www.oszk.hu/kotelespeldanyok>
- * 아이슬란드, <https://landsbokasafn.is/index.php?page=legal-deposit>
- * 아일랜드, <https://www.nli.ie/legal-deposit-libraries>
- * 이스라엘, <https://www.nli.org.il/en/at-your-service/who-we-are/depositing>
- * 이탈리아, <https://www.bncf.firenze.sbn.it/biblioteca/deposito-legale/>
- * 일본, <https://www.ndl.go.jp/en/collect/deposit/index.html>
- * 라트비아, <https://lnb.lv/services/izdevejiem/>
- * 리투아니아, <https://www.lnb.lt/leidejams/privalomojo-egzemplioriaus-pristatymas>

- * 룩셈부르크, <https://guichet.public.lu/en/entreprises/sectoriel/culture/secteur-litteraire/depot-legal-bnl.html>
- * 멕시코, <https://bnm.iib.unam.mx/index.php/quienes-somos/deposito-legal/lineamientos>
- * 네덜란드, <https://www.kb.nl/en/publishers/deposit-publications>
- * 뉴질랜드,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legal-deposit>
- * 노르웨이, <https://www.nb.no/pliktavlevering/>
- * 폴란드, <https://www.bn.org.pl/dla-wydawcow>
- * 포르투갈, http://www.bnportugal.gov.p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3&Itemid=63&lang=en
- * 슬로바키아, <https://www.snk.sk/sk/sluzby/v-sidelnej-budove/sluzby-vydavatelom/pokyny-pre-vydavatelov.html>
- * 슬로베니아,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obvezni-izvod#>
- * 스페인, <https://www.bne.es/es/conocenos/adquisiciones/deposito-legal>
- * 스웨덴, <https://www.kb.se/insamling-och-pliktleverans/ska-du-pliktleverera.html>
- * 스위스, <https://www.gbnews.ch/the-legal-deposit-keeping-the-printed-word-for-future-generations/>
- * 튀르키예, <http://www.millikutuphane.gov.tr/>
- * 영국, <https://www.bl.uk/help/how-to-deposit-your-print-publications>
- * 미국, <https://www.copyright.gov/mandatory/>
- * 중국, <https://www.nlc.cn/newen/su/ldop/bold/>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발 행 일 2023년 11월 29일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02-590-0500
Fax. 02-590-0530
<http://www.nl.go.kr>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관리연구소)

ISBN 979-11-6513-412-9 [비매품/무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